

2025체제전환

평가-전망

2025.07.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2025체제전환운동 평가-전망

2025년 7월 12일(토)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

진행 순서

1부. 2025 체제전환 평가-전망 토론회

<대선 이후 한국사회 전망과 체제전환운동의 과제>

12:30~15:00

사회: 선지현

발제: 광장을 이어 평등으로 가는 운동을 키우자 - 미류 / 6쪽

토론

1. 토론문 - 김선철 / 20쪽
2. 페미니즘, 과감한 전환과 도전이 필요한 때 - 나영 / 24쪽
3. 체제전환운동, '등장'에서 '확장'으로 - 박상은 / 30쪽
4. 체제전환/운동의 가시화 - 소성욱 / 34쪽
5. 투쟁하는 노동자가 광장에서 다시 만난 세계 - 이김춘택 / 37쪽

종합토론

2부.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전체회의

15:00~17:30

보고안건

1. 조직위원 가입 현황 / 45쪽
2. 주요 활동: 공동행동, 포럼, 세바넷 / 45쪽
3. 팀별 활동: 선전팀, 조직팀, 연구모임, 전략팀 / 57쪽
4. 재정 보고 / 63쪽

논의안건

1.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사업 계획 / 65쪽
2.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집행구조 / 68쪽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에 모인 우리는 아래의 약속을 존중하고 실천합니다.]

하나. 우리는 나이, 성별, 성적지향과 정체성, 가족형태, 장애, 병력,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둘. 우리는 개방적인 태도로 서로를 환영하고, 각자의 경험과 현재를 존중합니다. 민주적 토론을 지향하며,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합니다.

셋. 우리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차별을 비롯한 성폭력에 반대합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체제전환운동으로 스스로를, 동료들, 운동을 조직하는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가입하기]**



1부

2025 체제전환 평가-전망 토론회

대선 이후 한국사회 전망과 체제전환운동의 과제

광장을 이어 평등으로 가는 운동을 키우자

미류 |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1. 들어가며

까마득한 기억인 듯 어제의 기억인 듯 비상계엄 사태를 경과했다. 비상계엄 선포 바로 다음 날인 12월 4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던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며 윤석열 퇴진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 된 나라’까지 바꾸자는 결의를 모았다. 운동들이 반보수 전선에 포획되어 온 역사적 한계를 직시하되, 계엄 이후 열린 광장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확장하기 위해 분투했다. 모두가 애쓴 흔적은 광장에 선명히 새겨졌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광장의 승리가 다시금 ‘민주당의 민주주의’에 갇히지 않게 할 평등의 화살표를, 우리는 함께 세웠다.

조직위원회는 광장이 열리면서 모두가 말했던, ‘박근혜 퇴진 이후와는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 정부 첫 1년의 투쟁이 중요하다고 짚어왔다. 이제 대선 이후의 시간이 과거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체제전환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 ‘윤석열 파면’이 ‘이재명 당선’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보수 양당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추상적 비판을 넘어서야 한다. 다른 세계로 나아가려는 세력을 계속하여 등장시키며 대중을 조직해야 한다. 의지만으로 되지 않지만 의식적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여러 운동이 서로를 가로지르며 협력할 방안을 찾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화해갈지 전망하며 우리가 만들어갈 시간을 함께 그려보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

2. 극우 정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1)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속에서 지속될 정치의 위기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의 문제거나 한국 정치의 문제를 넘어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¹⁾. 이러한 위기가 이미 전세계적 극우의 약진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사태는 전지구적 정치 위기의 한국적 발현이다. 이때의 정치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가 스스로를 전개시킨-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행한- 결과 발생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수습하는-민주주의라는 질서의 작동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가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질서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오작동은 대표불가능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2024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귀환한 트럼프가 보여주는 바도 그렇다. 2000년대 이래 긴 시간을 거치며 공화당의 지지 집단은, 과거 민주당의 지지 집단이기도 했던 저학력 저소득층으로 옮겨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지자에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상층 엘리트 자본가들도 있다²⁾. 트럼프가 미국으로 제조업을 불러들이겠다고 예고한 관세 폭탄은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미국 경제도 동시에 혼란에 빠졌다. 미국의 GDP 감소 및 일자리와 실질소득의 감소 우려 속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심각한 재정 적자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고, 기축통화였던 덕분에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었던 미국 국채도 흔들리고 있다. 국제 분쟁 개입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의 반이민 정책은 광범위한 반대 시위를 맞닥뜨리고 있다. 체제의 위기는 정치 엘리트들이 주고받는 ‘기회’가 되지만 누구도 자신에게 쏠린 기대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도 심화되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출을 주도했던 산업에 제약이 가해진 가운데 건설경기 침체와 자영업 침체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유동성은 부동산으로 몰려갔다. 저금리 기조가 생산과 설비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정책도 금리 조정도 제한적인 구조였다. 윤석열 정부는 해법을 찾는 대신 감세와 긴축재정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선택에 몰두했다. 자신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던 윤석열에게 ‘반국가세력 척결’은 신념이 되어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확장재정을 주장해왔지만 이 역시 구조적 해법

1) 1월 23일 열린 정세포럼 <자본의 위기와 극우세력의 준동, 광장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 이를 다뤘다. 12.3 내란 사태를 자본 축적 위기와 극우 정치 부상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체제전환의 전망 아래 민주주의의 탈환과 재구성을 위한 운동의 과제를 토론했다.

2) 머스크와 트럼프는 최근 절교했지만 그 이유는 트럼프가 하층 계급을 대표하기 때문이 아니다. 자본의 흐름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보다는 단기 처방이었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이유는 줄곧 ‘경제 민생’이었지만 민주당도 대안으로 부상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출구 없는 윤석열의 ‘자폭’이었다. 그러나 명백한 내란(과 외환) 시도를 종결시키는 데 닉 달이 걸릴 만큼 정치의 위기는 심각했다.

2) 민주당 우세의 정치 구도에서 극우 정치의 활성화

윤석열 파면 이후 열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과반에 못 미치는 49.42%였지만 역대 최다 득표(1728만 7513표)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재 탄핵 인용이 잘한 결정이었다는 응답이 74%³⁾라는 조건에서 시작된 선거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15%를 득표한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계엄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뿐더러 내란 세력과 선 그으며 반성하지도 않았고 후보 등록 직전 당 지도부에 의한 후보 탈취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김문수가 후보로 정리된 5월 중순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반-이재명 정서의 결집력이었다. 김문수에게 투표한 이들 중 40.6%는 ‘내가 싫어하는 후보 당선 막고 싶어서’라고 응답했다⁴⁾. 내란을 겪은 이후로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은 크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이재명을 발판으로 보수정치를 재건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은 재기를 꾀할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지지율이 급락했다⁵⁾. 국민의힘은 보수의 구조적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회 107석을 보유하는 등 여전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선불리 이것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 탓에 오히려 쇄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내부 갈등을 반복하며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대선 기간 이재명의 중도 보수 선언은 보수와 진보라는 구도를 민주당 내부의 것으로 포섭하면서 보수 양당이 분점해온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이재명의 당선으로 87년 직선제 이후 최다 의석을 확보한 정부가 탄생했다. 재임 기간 중 대법관 10명을 임명하게 되는 상황과, 최근 수 년에 걸쳐 당내 견제 세력이 소멸해온 상황까지 고려하면 민주당의 권력 독점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아직까지 이재명 국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첫 일주일 긍정평가가 53%, 향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65%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새 정부 추진과제로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회복’을 꼽았다⁶⁾. 이재명의 ‘능력’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민중이 체감하는 경제 위기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실질소득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주거비 부담이 이미 높아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⁷⁾.

3) 4월 9일 공표된 MBC 의뢰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수용’한다는 응답은 87%였다.

4) 제21대 대통령 선거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심층 출구조사 분석. 이재명에 투표한 사람의 77.1%는 ‘지지 후보 당선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5) 대선 일주일 뒤 실시한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1%였다. 더불어민주당 46%, 개혁신당 5%.

6) 전국지표조사 2025년 6월 2주. 국민 통합과 정치갈등 해소 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 29%, 계엄사태 진상 규명 26%, 검찰·사법개혁 20%, 부동산 대책 마련 14%

7) 현재의 고물가는 국제 질서 변동의 영향으로 단기간 해소가 어렵다. 물가가 다소 안정적일 때에도 한국의 고물가는 식료품을

민주당의 권력 독점은 민주당이 문책당하기 쉬운 조건이 된다.

국민의힘 약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심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내부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멈추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를 자신의 힘으로 조직하는 데 이르는 것은 어렵다. 반-이재명/민주당은 진보엘리트에 대한 반발을 정치적 자원으로 삼는 극우 정치의 힘으로 조직될 것이다. 21대 대선 출구조사를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2030세대에서 거대 양당 합산 지지율(20대 이하 72.2%, 30대 80.3%)이 두드러지게 낮다. 개혁신당 이준석은 8.34%의 득표에 그쳤지만 청년층에서 개혁신당 지지율이 높았던 점을 주시해야 한다.

3) 안티페미니즘을 타고 전개될 한국의 극우 정치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극우 정치는 지역마다 다른 쟁점을 만든다. 그러나 극우가 공유하고 확산하는 세계관의 핵심은 다르지 않다. 극우는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위치를 전복하면서 구조를 삭제한다. 백인 또는 내국인이 상대적으로 보호받는다 고 간주되던 질서는 허구이며, 오히려 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난민이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조적 인종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평등의 요구를 억압의 담론으로 뒤바꾼다.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역차별 담론으로 전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을 낳는 구조를 부정하는 탓에 극우 정치는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미국의 농장주와 서비스업을 곤경에 빠뜨린다. 이주노동자가 국민의 권리를 앗아가는 커녕 이주민에 대한 착취로 버티는 것이 지금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전통과 가족의 강조, 인종/민족/국민주의적 결속은 정치적 선동에 효과를 발휘하지만 대중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모순에 빠진다. 그러나 불만족은 극우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세력 내 확증편향을 통해 더욱 강화된 형태로, 기존의 상식이나 도덕의 기준을 무너뜨리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더욱 강력한 증오 선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준석은 한국에서 극우의 세계관을 정치 무대에 올리며 대중에게 서사를 부여해왔다. 여성이 차별당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으며 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의 권리를 빼앗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고 한다.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환경 PC주의’일 뿐이며, 풍력발전은 ‘중국을 위한 것’, 국민연금 은 청년을 수탈하는 것,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 배제 등의 주장은 모두 ‘우리’를 재구성하려는 극우 정치의 도전이다.

개혁신당에 대한 2030 남성의 높은 지지율(20대 37.2%, 30대 25.8%)은 두드러지는 현상이었다. 이를 두고 2030 남성이 극우화되고 있다거나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선부르다는 등의 논

비롯한 필수재에서 두드러지는 점, 같은 품목에서도 값싼 상품의 가격 상승폭이 큰 ‘칩플레이션’ 효과 등으로 저소득층에게 더욱 고통을 안긴다.

쟁도 있었다. 만약 극우를 내란에 찬동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한다면 2030 남성이 극우화되고 있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준석은 계엄 당시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려고 했던 집단과는 달랐다. 그러나 ‘극우’가 뚜렷한 이념 성향을 보이며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극우 정치 대응을 어렵게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확인된 것처럼, 언젠든 극단적 주장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성으로 극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극우는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도 성장한다. 개혁신당의 지지층이 2030 남성에 쏠려 있는 것은 한국의 극우 정치가 사회경제적 요구를 조직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한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극우 정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를 알보아서는 안 된다. 극우 정치에 맞서기 위해서는 집단의 개조가 아니라 사회의 개조가 필요하다.

정치의 위기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기존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해소할 대안이 없는 한 극우 정치는 확산될 수밖에 없다⁸⁾. 당분간 극우 정치의 확산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안티페미니즘이다. 반중 선동도 이어지겠지만 국제질서 변동의 영향과 외교적 이유로 그 확장성이 제한될 것이다. 안티페미니즘은 그 핵심 논리에 현재의 정치세력 대부분이 동조하여 단호하게 제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확산되기 쉽다⁹⁾. 청년층에서 성별에 따라 두드러진 선택의 차이는 불안정한 삶의 구조적 원인이 숨겨지는 동안 젠더가 서로를 타자화하는 중심 축이 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안티페미니즘이 왜곡하는 적대를 지배계급에 맞서는 저항으로 조직하기 위해 페미니즘이 더욱 중요해졌다. 체제의 위기를 조명하는 관점으로서, 상호의존의 세계를 구축하는 집합적 실천으로서 페미니즘의 강화가 체제전환운동에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극우의 이념을 교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반-이재명이 극우의 무기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향한 힘으로 조직되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8) 그러므로 극우 정치의 확산을 막는 길은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만드는 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의 부상엔 못 미치지만 전 통적 좌파를 넘어선 급진적 대안이 대중의 호응을 얻으며 등장하고 있는 점도 주시해야 한다.

9) 보수개신교가 주도하는 반동성에 대중운동의 길을 터준 것이 민주당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남성 지지를 하라기 관찰될 때 민주당은 그 이유를 페미니즘의 과잉에서 찾았는데 윤석열 파면 투쟁에서 2030여성이 부각될 때 민주당은 페미니즘의 전개를 보지 않았다.

3. 이재명 정부에서 무엇이 ‘진짜’ 달라질 것인가

1) 주주 자본주의 강화와 관리되는 불만

당선 후 이재명의 첫 ‘현장’ 행보는 증권거래소였다. 민주당은 이미 상법 개정의 의지를 밝히고 추진해왔지만¹⁰⁾ ‘대통령 이재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려 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로의 변형에서 ‘주주 자본주의’는 변화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다. 한국에서는 IMF 구제금융 이후 1998년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이 있는 후 꾸준히 이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이는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주장되기도 한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가 가진 문제에 비추어 개선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의 변화가 민주주의를 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주주가치 실현과 배당을 위해 다양한 노동유연화 전략이 도입되고 노동자의 협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¹¹⁾.

주식시장 활성화는 기업의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상법 개정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보내자는 목표로도 추진된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비금융기업은 유동성이 증가해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자본시장 합리화도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보여준다. 결국 생산 부문의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자산 부문의 불안정성이 정치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가치가 주요 관심사인 중산층이 정치적 풍향계가 될 것이다.

경제성장률의 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경제적 불만은 민생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다. 그러나 민생지원금의 단기 내수 진작 효과도 그리 높지는 않으며 장기적 효과는 누구도 장담하지 않는다.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 보니 추경 편성에 큰 반대가 없었지만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증세와 관련한 공약을 내지 않은 것은 ‘인기 없는 정책’에 대한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금융투자세 폐지나 상속세 인하 등 부자 감세 정책에서 이미 국민의힘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확장재정 정책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자산이나 소득 불평등을 가리키는 지표가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의 심화가 저절로 평등의 요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문제

10)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기구 명칭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일명 국장부활TF다.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대선 직후 다시 발의했다.

11) 주주 배당을 강화한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보잉사 제작 항공기 사고의 빈발이다.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삼으며 과세를 강화할 수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미래가 불안정하다 느끼는 집단 역시 불로소득에 기대를 건다. ‘더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와 동경 사이에는 경계가 없다. 이러한 현실이 극우 정치를 확산하는 토양이 되기도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정치의 무대에 등장하는 ‘경제’가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중심으로 재현될수록 그것을 넘어서는 구조를 드러내는 일은 체제전환운동의 과제가 된다. 투자자로 동원되면서 시장에서의 공정성에 미래를 거는 대신,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시장을 넘어서는 공공성의 미래를 여는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2) ‘성장’으로 정렬되는 사회와 노동권의 이원화

이재명은 ‘진짜 성장’을 강조했다. 방위산업담당관을 국가안보실이 아닌 경제수석실로 이관시키며 그 성격을 분명히 하는 등 ‘성장’의 기조 아래 여러 정책을 정렬시켰다. 그러나 공약의 실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AI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가자며 국가전략을 발표했고, 윤석열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자며 ‘총력전’을 선포했다. 이재명 정부는 초대 내각 인선에 이를 반영하고 ‘AI 국민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AI부문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국민펀드는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의 신자유주의적 버전일 것이며 AI가 낳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 등이 부차화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 전략 대신 ‘한눈팔기’ 전략을 내놓는 셈이다.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각자의 위치에서 다같이 잘살게 되는 길은 없다. 성장의 결과가 위기며 위기의 대안은 평등이라는 점을 꾸준히 말해야 한다. 이국의 안보 위기를 방위산업 시장의 기회로 다루는 등 모든 정책을 ‘성장’으로 정렬시키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동시에 성장과 탈성장의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 민중의 삶의 필요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것의 과잉생산과 필요한 것의 과소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겪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말하는 동안 실제 벌어지는 변화의 핵심에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고속도로’를, 보수언론은 원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쟁점이 형성되는 듯 보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탈원전 기조를 수정했다. 재생에너지의 상품성과 원전의 안전성을 겨루는 듯 보일 때에도 양측 모두 우리의 삶과 무관한 ‘성장’을 위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추구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원의 전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목적과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동의 권리는 성장의 논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노동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정면에서 탄압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조법 2, 3조 개

정 약속도 무산되지는 않을 듯하다. 그러나 개정의 효과가 무엇이 될지는 법안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힘에 달려 있다. 노조법의 쟁점 사안들, 즉 원청의 단체교섭 회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민주당 정부가 주도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산의 결과였다. 노조법의 한계에 기인했다기보다 자본의 힘이 우세한 조건에서 법 해석의 편향이 지속되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 화물연대나 건설노조를 공정거래법이나 공갈협박죄 등으로 다루는 시도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명문 규정을 두어 이를 교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마땅한 책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구조가, 기업이 단체교섭 의무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거는 구조로 바뀌는 효과에 그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끌어내고 법제도 개선이 운동의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21대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정치방침 정하기를 회피하고 사실상 이재명 지지를 표방한 것은 패착이 되기 쉽다. 민주당이 공약한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등은 그 방향에서 노동운동의 요구와 맞닿아있지만 전일제 정규직 노동자 집단을 넘어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증진하는 방안이 되기는 쉽지 않다. 계속 고용이나 재고용이나 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정년 연장도 비슷하다. 하청노동자는 청년기부터 재고용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부터 플랫폼 등 도급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한 데서도 드러나듯¹²⁾ 민주당의 노동 정책은 노동권의 이원화 구조¹³⁾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일정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노동자의 권리 확대에 이르지 못하면서 계급 간 갈등이 계급 내 갈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체제전환운동은 왜곡된 쟁점 구도 안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노동의 보편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주장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위한 운동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3) 기본적 권리의 주체를 지우는 기본사회

이재명의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공약은 현재의 복지제도가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짚으며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강조하기도 한다. ‘공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나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기본사회’ ‘아프면 쉴 권리’ 등 비상행동의 사회대개혁 과제와 합치하는 내용도 많다. 이것을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 기본사회위원회 구상이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12) 5월 1일 이재명은 ‘최저보수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올렸으나 대선 기간이 시작된 후 “민주당이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가 나왔다.

13) 2022년 대선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이 이번 대선에서는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어 다시 나왔다. 법안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다른 기본법을 두어 권리를 이원화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래 유사한 방식의 거버넌스는 사회운동을 신자유주의 정치의 부속물이나 보완물로 만들어온 주요한 매개였다. 문제는 거버넌스 자체라기보다 대중운동 없는 거버넌스의 한계에 있다. 사회대개혁을 명분으로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여기저기서 강조될 때 체제전환운동이 일관되게 주목해야 하는 것은 대중운동의 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이다. 이재명 정부가 자신의 공약과 정책에서 평등을 지우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야 한다.

대선 기간부터 이재명 정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인권과 평등의 요구가 대대적으로 후퇴한 것이다. 성평등을 숨긴 것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이주민의 권리도 별반 언급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누구나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만 누구나 기본적 권리의 주체가 되는 조건을 만드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이재명의 기본 사회는 여러 사회구성원이 정치적 주체로 서로 갈등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모습이라, 행정부가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기본서비스를 제공할겠다는 구상일 뿐이다. ‘공적인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갈등은, 공공기관에 대해 갈등하는 민원인들 사이의 관계가 되어버린다. 집권 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은 여가부에 “남성 불만 담당 부서 있나” 물어보았다. 국회에서는 “남성과 함께 하는 성평등”이 여가부 확대 개편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민주당의 성평등 기초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차별 피해 민원인으로 만드는 데 본질이 있다. 성평등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조적 성차별에 저항하는 정치적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다. 변혁의 기획이자 실천으로서의 페미니즘이 삭제될 때 지워지는 것은 정치적 주체화의 가능성이다. 이런 조건에서 다시금 검찰개혁 등의 정치 쟁점이 반복될 때 대중의 과잉 동원과 정치 냉소가 반복되며 사회운동의 입지까지 좁아질 수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열린 광장에서는, 나의 삶이 민주주의의 역사와 접속하는 경험,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감각이 공유되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 ‘혼자 남겨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 느끼던 사람들은 혐오가 제지되고 환대와 연대가 이어지는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바꾸고 싶어졌다. 이들이 정부를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위치로 밀려나지 않도록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광장 이후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다. 성평등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우리 스스로 해내는 경험, 정부의 사회정책이 부족하거나 틀렸다는 추상적 비판을 넘어 우리 자신이 사회가 되어가는 운동의 기획이 필요하다.

4. 체제전환운동은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

1) 운동진영 안팎으로 가시화된 체제전환운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우리 자신의 퇴진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여러 단위들과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이하 세바넷)를 구성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석열 파면 투쟁의 성과가 도로 민주당으로 수렴되지 않고 독자적 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논의와 집행에 결합하는 한편,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 및 신문 <평등으로>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평등의 요구를 조직했다. 남태령과 한강진을 경유하며 뚜렷해진 대중의 역동과 접촉하며 내란 이후 다른 사회의 방향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운동진영 안에서는 ‘평등’과 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세력으로, 기존의 주류 세력과 다른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러나 긴박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단위가 모이다 보니 그 목표와 상이 조금씩 달랐다. 대안적 세력화를 모색하자는 추상적 목표가 있었지만 구체적 상이 모호한 가운데, 서로 다른 운동의 기대나 경험의 차이 등으로 파면 이후를 예비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윤석열 없는 나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를 제시하며 광장의 대중과 함께 평등의 화살표를 세웠다는 점을 공동의 성과로 꼽는 데에 이견은 없다. 비상한 시기 정세 인식을 맞춰가며 공동실천을 벌이는 경험이 소중한 성과로 남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여러 단위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체제전환운동의 전국화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조직위는 세바넷을 구성하고 활동을 벌이는 데 헌신적인 기여를 했으나 조직위 내부 논의와 실행에 그만큼 힘을 기울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세바넷 성과의 일부는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경유하여 대선 시기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으로 이어졌다. 민주노동당은 TV 토론을 통해 광장을 잇는 역할을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호명하는 선거운동을 벌이며 민주당과 다른 정치세력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4개 산별(공공, 금속, 보건의료, 화섬)과 7개 지역본부의 조직적 지지방침과 함께 민주노총 안에서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쟁이 조직된 것도 성과다. 득표율과 별개로, 차이와 이견을 조정하며 연합하려는 자발적 노력, 2030 여성의 지지율이 높았던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과 현장, 풀뿌리와 밀착하지 못하는 한계도 확인했다.

조직위는 ‘광장에서 세운 평등의 화살표가 지워지게 두지 말자’는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조직하며 대선 이후의 과제를 환기했다. 그 과정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에 관한 여러 쟁점을 확

인하기도 했다. 체제전환에 동의하는 여러 운동과의 협력과 연대의 실천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 “광장의 언어가 제도 정치의 경계에 닿으면 일시적이고 주변적인 언어로 휘발될 수도 있지만, 사회운동의 경계에 닿으면 미래상(像)을 구체화한 언어이자 광장에서 힘을 보여주었던 언어로 지속될”¹⁴⁾ 것이다. 이것을 시작할 실마리는 ‘평등’에 있다.

2) 평등으로 가는 운동을 확장하며 세력화를 위한 실천을 벌이자

이재명 정부는 위기 관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며 얼마간 안정감을 주는 데는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드러내며 사회를 수선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평등의 과정이자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서의 정치를, 사회구성원들 간 위치와 위계를 분배하는 치안으로 대체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분배에 진보진영과 시민사회 일부가 이미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안에 대한 반발은 극우 정치를 통해 조직되기 쉽다.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평등과 해방을 향한 정치적 힘으로 조직되도록 하기 위한 체제전환운동의 과제가 더욱 막중하다. 주어진 위치를 벗어나려는 투쟁, 불안정노동자와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이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투쟁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우리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 방향을 꾸준히 드러내보여야 한다. 사회운동이 그걸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광장에서 길어올린 평등은 체제전환운동이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발판이다. 광장에서 자연스럽게 평등의 상징이 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이재명 정부에서 지워지지 않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체제전환운동이 대중과 함께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선이다. 신자유주의 정치가 평등을 기각하려 해도 평등의 요구가 사라질 수 없으며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길이 되게 할 때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이 공공성이다. 이윤을 위한 생산을 중심에 놓는 체제가 착취와 구조적 차별을 심화시켜온 것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모두의 삶의 필요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로 나아가는 경로로 공공성을 재위치시켜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 투쟁은, 단지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의 체계적인 감축을 위한 계기로, 더 나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민중의 것으로 가져오기 위한 투쟁으로서 더욱 주목될 필요가 있다. 주거권과 노조할 권리, 탈시설과 가족구성권을 요구하는 우리가 주거와 의료와 돌봄이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는 이들이며 우리 자신의 결속으로부터 신자유주의가 해체해온 ‘사회’를 다시 만들어갈 것임을, 대중이 알 수 있게, 함께 투쟁하고 싶게 만들자. 이것이 민중의 세력화로 나아갈 길이다.

14) 유현미 김이선 김정환 장진범 박상은, ‘광장에서 만난 세계’, <경제와 사회> 2025년 여름호.

각자의 운동을 평등으로 가는 길에 위치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러나 개별 운동의 요구를 모아놓는 것만으로 다른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 의제와 요구들의 모자이크와 다른, 새로운 세계로 함께 나아가는 투쟁임을 운동들부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운동의 요구를 특정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특수한 요구로 일축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대항 정치를 무력화하는 주요한 전략이다. 이런 조건에서 대중들도 운동의 요구가 자신의 것이 되게 하는 일이 어렵다. 현실의 운동 속에서 다른 세계를 드러내보이려면 여러 운동의 가로지르기가 필수적이다. 노동조합의 차별금지법 투쟁이나 성소수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요구, 혐리스의 기후정의 투쟁은 그 자체로 대중이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경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연대투쟁을 하는 의식적 노력도 필요하며, 운동의 구획을 전제한 ‘연대’를 넘어서 다른 운동과 자신의 운동을 내용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연루시키는 과정을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 어떤 운동이 흥하는 만큼 나의 운동이 흥할 수 있도록 서로의 조건과 정세를 살피며 힘을 키우기 위한 전략을 함께 세우고 공동 실천의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 운동 안에서 대중이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를 이동하며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에서부터 평등의 대오를 만들어 광장을 잇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자. 계엄사태로부터 1년이 되는 12월,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평등의 행진을 조직하자.

3) 지역정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풀뿌리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자

계엄 사태로부터 반 년에 이르는 기간의 활동에서 체제전환운동의 풀뿌리가 지극히 취약하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다. 광장에서부터 대선까지 체제전환운동은 주로 의제와 입장 등을 통해 평등을 부각시켰다. 조직된 대중의 힘에 기반을 둔 실력은 아니었던 것이다. ‘평등’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진 언어가 되게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평등을 요구하는 조직된 대중이다. 체제전환운동은 공중의 주장과 지상의 대중을 연결하며 민중의 세력화를 향해 꾸준히 길을 내야 한다.

체제전환운동의 풀뿌리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풀뿌리는 단순히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민중이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부딪친 문제를 재해석하고 공동으로 대안을 찾아가며 집합행동을 통해 정치적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뜻한다. 이것은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구체적인 관계와 조직을 통해 가능하다. 현대의 극우가 아래로부터 자신들만의 풀뿌리 정치를 벌이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제도정치의 장에서 겨루는 것으로 체제전환의 정치가 가능해지지 않는다. 우리와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욱 많은 이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조직해야 한다. 기층에서 쌓아올린 힘을 통해서

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러 운동이 각자의 방식으로 풀뿌리 조직화를 시도해왔다. 노동조합이나 정당이나 사회단체나 각자의 조직 형식과 부문의 특성에 기반을 둔 풀뿌리 강화 전략이 있다. 여기에 하나의 방법론이 있을 수는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의 풀뿌리, 여성운동의 풀뿌리, 기후운동의 풀뿌리, 빈민운동의 풀뿌리가 따로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부문별로 나뉜 상태에서는 그저 조합원이나 회원이나 당원일 뿐이다. 각자의 부문을 넘어서 체제전환으로 서로 연결될 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 제 집단을 더욱 파편적으로 분할하고 위계화하는 조건에서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서로 다른 운동의 연대와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간 분절된 운동들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노력과 병행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지역을 함께 주목하자.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가 심각한 ‘지방소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과 비교할 때 비수도권 지역에 거점을 둔 운동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는 광장의 지역별 편차와 분위기에서도 드러났다. 수도권으로의 권력 집중은 운동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흥행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지역 운동의 강화는 ‘지역’을 강조하거나 운동을 분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부정의는 중앙집중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된 권력이 오직 자본을 위해 지역을 동원해온 데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역정의’의 관점에서¹⁵⁾ 체제전환의 종합적 구상과 운동의 전국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의 러스트벨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지역’은 노동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지역’을 의제로 삼는 노동조합운동이 아니라 지역을 거점으로 서로 다른 운동들과 가로지르는 경험 속에서 노동조합운동도 활성화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응하는 투쟁에서도 지역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증오 선동을 통해 극우가 확산될 때 그것에 단호하게 맞설 사회적 힘도 법제도에 한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관계와 결속으로부터 형성된다. 체제전환운동의 주체를 조직하기 위한 거점으로 지역을 주목하자.

지역에서 체제전환운동 활성화를 모색하는 이들이 그 조건을 점검하고 전망을 실질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자. 조직위원회에서 전략적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찾고 유사한 목표를 가진 흐름을 함께 살피며 가야 한다. 체제전환운동의 전국화와 세력화는 한걸음에 이루어지는 과업이 아니다. 멀리 내다보며 포부를 키우되 아주 작은 변화에서 그것이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자.

15) 4월 5일 열린 퇴진너머 평등으로 충북포럼 <여기서 우리가 바꾸면 돼!>의 ‘지역소멸과 공공성’ 세션에서 지방소멸 담론의 문제를 짚으며 ‘지역정의’ 관점이 제안되었다. 6월 26일 열린 작은포럼 <체제전환을 위한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에서는 ‘지역정의’가 분권 자체와 다른 종합적 구상과 공공성의 설계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5. 나가며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과 국제질서의 불안정성과 같은 조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높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민주당은 아니’라는 말로 대중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실패도 체제전환의 미래를 보증하지 않는다. 체제전환운동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운동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처럼 우리는 정권을 넘어서는 체제의 작동을 주시하며 근본적인 비판과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다양한 경로로 운동진영이 포섭되면서 민주당의 기초 아래 운동의 요구가 선별적으로 수용되는 일도 반복될 것이다. 한쪽에서는 ‘되는 것부터 하자’는 분주함이,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는 또 ‘나중에’라는 비관과 좌절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나는 이들이 아니라 먼저 나아가는 세력이다. 우리‘도’ 데려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오라고 투쟁하는 것이다.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를 꿈꾸기에 우리는 적고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꿈이 광장을 지나며 더욱 커지고 단단해졌음을 기억하자. 이 세계에서 가장 불가능해보이는 체제전환이 유일하게 가능한 미래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운동들을 엮으며 광장에서 세운 평등의 화살표를 두텁고 선명하게 만들어가자. 올해의 흐름을 이어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에서 달라진 우리를 다시 만나자.

토론문

김선철 | 체제전환연구모임

발제문은 1) 극우정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 이재명 정부에서 무엇이 ‘진짜’ 달라질 것인가, 3) 이런 진단을 기반으로 체제전환운동은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라는 3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12.3 계엄 사태가 ‘전지구적 정치 위기의 한국적 발현’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이것이 야기한 결과로써 (혹은 이와 동시에 진화한) 현재의 정치지형을 분석하고 체제전환운동의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는 접근에 동의한다. 발제문이 큰 틀에서 문제의 진단과 과제를 뽑아냈다면, 토론문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한 실천 방향과 관련해 몇 가지 함께 고민해봐도 좋을 지점을 던져보고자 한다.

1. 정치 위기와 극우: 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화와 함께 정치의 신자유주의화도 함께 보자

발제문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저성장으로 표상되는 자본 축적의 위기에 대한 “출구 없는 운석열의 ‘자폭’”이었으며 ‘보수 중도’를 선언한 이재명과 민주당도 자본 축적 위기에 대해 동일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성장’과 ‘민생’을 기본 프레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는 민중의 체감하는 ‘경제 위기’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2030 남성의 지지에 기반한 이준석이 안티페미니즘을 주된 ‘서사’로 사용함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성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모두 ‘극우정치’의 토양이다.

7-80년대 이후 확대·심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한계에 다달은 것이 이 오늘날 정치 위기의 배경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현대의 극우는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도 성장”하는 거라면,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본의 강력한 동맹세력을 자처한 국가가 없었다면 신자유주의 경제는 지금과 같이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국제/국내적 맥락에서 국가의 역할은 단지 자본과 시장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걸 넘어 민주주의의 작동조차 ‘시장화’하는 방식을 띠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개인 유권자를 기본 단위로 삼는 ‘정치 시장’으로, 선거는 유권자의 수요 조작을 통해 공급(득표)을 확보하는 시장 쟁탈전으로 변질되었다. 여기에 정부와 정당은 물론 NGO와 사회운동을 지향하는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기업적 ‘경영’ 마인드가 침투하고 ‘시장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런 변화는 극우 정치의 확산에 어떻게 기여했을까? 정치의 시장화는 발제문이 제안하는 저항의 방안에 어떤 제약을 가할까?

2. 이재명 정부의 성격에 맞는 실천 과제는 따로 없을까?

발제문은 이재명 정부가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성장 정책을 펼치면서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조건에서 ‘기본사회’와 같은 레토릭과 ‘민생 지원금’이나 구조적 차별로 피해 받는 이들을 ‘민원인’으로 만드는 적절한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전망한다. 여기서 ‘기본사회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는 잠재적 저항을 체제내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런 전망 속에서 제시되는 체제전환운동의 대응은 풀뿌리 베이스의 확대와 결속을 통한 “정치적 주체화”로 귀결된다. ‘주체화’의 과제는 정세를 떠나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원칙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정치 환경이 바뀌었는데 대응 방향이 체제전환운동 조직위가 만들어졌던 윤석열 정부 때의 그것과 차이가 없어서는 안될 것 같다.

‘성장’이라는 기본 방향은 다르지 않더라도 국정기조로 제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의 3대 전략에 ‘상생’이 들어가 있고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기본사회’ ‘아프면 쉴 권리’와 같은 수사를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전환운동의 전술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컨대, 주짓수나 유도에서처럼 상대의 힘을 역으로 상대를 공격하는데 사용하라 했던 ‘전술의 달인’ 알린스키는 적이 한 말과 제시한 규칙을 적을 공격하는데 최대한 사용하라 일렸는데, 이재명의 ‘말’과 ‘정책’은 (성명서나 기자회견문을 넘는) 우리의 실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활발한 조직화와 대중 투쟁이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정부에서 벌어졌을 때 사회운동이 진보적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겠다.

거버넌스도 이런 맥락에서 조금더 전술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까. 발제문에서 말하듯, 거버넌스는 “사회운동을 신자유주의 정치의 부속물이나 보완물로 만들어온 주요한 매개”였다. “문제는 거버넌스 자체라기보다 대중운동 없는 거버넌스의 한계”에 있었으며, 따라서 “대중운동의 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한다. 그런데 거버넌스를 대중운동의 힘을 강화할 계기로 삼을 수는 없을까. 2021년 만들어진 ‘탄중위 해체 공대위’는 문재인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거버넌스를 매개로 만들어져 기후정의동맹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대중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바깥에서 비판하며 전선을 긋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으로 참여해 그 안에서 거버넌스의 비민주적 구성과 의사결정구조를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시장화된 정치의 대표격인) 거버넌스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공대위 활동이 (나중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탄중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막지는 못했지만, 탄중위에 참여했던 몇몇 단위의 사퇴를 이끌어냈고, 이는 ‘(기후) 거버넌스’가 가진 문제를 공론화하고 기후정의운동을 대중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3. 풀뿌리 강화라는 체제전환운동의 과제

탄핵 광장 국면에서 활동한 세바넷과 대선을 앞두고 구성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대선 활동에 대한 발제문의 진단에 동의한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과 현장, 풀뿌리와 밀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풀뿌리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 다만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나눠봐야할 고민은 있을 것 같다. 예컨대, 조직된 대중의 힘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걸 갖춰나가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 세바넷, 연대회의, 선대위는, 혹은 각각에 참여했던 단위들은 이후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까. 다층적인 공동활동의 경험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이는 이후 어떤 공동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혹은 이어져야 하나. 체제전환운동 조직위 참여 단위 간의 ‘가로지르기’를 넘어 체제전환운동 조직위는 다른 단위나 연단체, 정당과 어떤 ‘가로지르기’를 기획할 수 있을까.

풀뿌리 강화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역에 주목하고 ‘지역정의’를 모색하자는 제안은 반갑다. 발제문이 잘 정리하듯 조직된 대중의 힘은, 풀뿌리는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재해석하고 공동으로 대안을 찾아가며 집합행동을 통해 정치적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

하는 ‘지역’이 ‘지방소멸’의 맥락에서 비서울/비수도권을 지칭하는 개념처럼 제시되는 것은 의아하다. 운동의 기반으로 ‘지역’에 대한 발견과 ‘지역(부)정의’의 문제의식이 비서울에서 나온 것은 분명하고, 또 이렇게 된 데에는 지역적 위계와 격차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하지만 풀뿌리 강화가 비서울 지역의 과제가 아닌 이상, 우리는 서울에서도 각 ‘지역’마다 다양한 부정의의 현상이 있고 여기에 맞서 싸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투쟁을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연결하는 것이 풀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는 사실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않을까. 지역이 민중의 삶, 노동, 사회적 관계가 벌어지는 현장이라면 말이다.

얼마 전 뉴욕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적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는 이런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는 뉴욕시라는 ‘지역’에서 주거, 교통, 돌봄, 안전, 의료 등 지역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불평등’과 ‘정의’의 렌즈로 조망했고, 선거 초기 1%의 지지율에서 시작해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맘다니 선본이 46,000명에 달하는 자원활동가를 조직해서, 이들이 몇 달 안되는 기간 동안 동네 곳곳을 다니며 지역민들을 만나 설득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사회 단체 활동가도 있었지만 대면/비대면 조직화를 통해 연결된 평범한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풀뿌리 활동’으로 인해 한 관찰자는 뉴욕 웬만한 동네 가게에는 맘다니 포스터가 붙었고, 매일 출퇴근하는 길 골목골목마다 맘다니 선거복장을 한 운동원을 만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회고했다. 정치의 토양과 사회운동의 문화와 방식, 역량이 다른 상황에서 이를 당장 한국에 수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서울이든 삼척이든 구례든 지역에서 해볼만한 조직화에 대한 상상은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민주노동당이 한때 잘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전에 전국 곳곳의 삶터와 일터에 1000개가 넘는 분회가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공간에서 이들과 만남과 대화의 기회 만들고 사회운동의 ‘구호와 요구’를 제시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에서 일상에서의 공생과 연대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서로 간의 공감을 넓힐 수 있는 자리를 각자의 지역/동네에서 만들어보는 상상을 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운동 방식과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다. 상근자 중심의 운동, ‘공중전’ 중심의 운동에 익숙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단체나 네트워크 밖에 있는 이들과 지역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 활동가들이 익숙한 관성을 벗어나 도전과 혁신을 꾀할 의지를 키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를 목적으로 하는 ‘풀뿌리운동 학교/캠프’와 같은 형식도 생각해봄직하지 않을까.

페미니즘, 과감한 전환과 도전이 필요한 때

나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1. 평가에서부터 시작해보자.

계엄 이후 극우를 분석하는 데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위기는 극우의 성장이 아닌 진보 좌파의 자리가 심각하게 소멸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는 비단 국회 내 의석을 가진 정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 모든 영역에서 벌어져 온 일이다.

집권 세력과 영합하여 특권을 유지하며 지지 기반을 구축했던 과거의 보수 세력과 달리 90년대 후반 이후의 뉴라이트, 기독교 우파, 우익 단체들은 시민사회 영역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새롭게 세력을 구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주요 공공 영역과 개별 현장에 개입하면서 자신들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우선 정부 역할의 신자유주의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 역할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는 눈에 띄는 민영화나 공공부문의 인력 감축으로만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근간에서 진행되어 온 일은 위탁 운영과 바우처의 확대, 대출 형태의 지원 확대 등으로 정부의 지출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를 시장과 매개하여 개별화하고 자격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게 만든 것이다. 공공 서비스와 복지 영역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책임 있게 운영되어야 할 기관을 단기 위탁 운영으로 불안정하게 운영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관련 영역 노동자의 노동 여건 또한 불안정한 여건에 머무르게 했다. 또한 각 개인을 공적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만한 자격을 둘러싼 경쟁 대상으로 만들었고(취약성 경쟁, 역차별 주장), 사회적 재생산을 지속가능한 공적 역량으로 구축되도록 하는 대신 개인의 능력을 입증해야 할

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 지대가 되게 만들었다.

한편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민사회 영역으로 진출한 기독교 우파, 우익 단체들은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부터 파고들어 위탁 운영을 맡거나, 위탁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를 틈타 주요 기관의 위탁 운영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교육, 복지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을 장악해 왔다. 중요한 점은 역설적이게도 이 지점에서 종교 기반의 우파 단체나 우익 단체들이 각 개인에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정동(교인, 중장년층, 봉사, 보호주의, 가족주의, 물적 지원 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합의는 한때 과거 독재, 권위주의 정부에서 제도적 민주화 이후의 자유주의 정부로 이행하면서 이론 중요한 민주적 정책 수단인 것처럼 여겨졌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집단적 요구를 제도적 합의의 틀로 흡수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논의의 진전과 급진적 시도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와 정당이 책임을 회피하는 손쉬운 핑계의 언어가 되었다.¹⁶⁾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한 다양한 위원회와 합의 기구가 작동하면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에 참여하였고 일정 부분 제도화를 통한 진전을 이뤄내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이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제도화의 수준을 넘어선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되기도 했다.

이 토론에서 중요하게 짚고 싶은 부분은 이처럼 정부 역할이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변동하고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체,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작동과 다양한 위원회 운영, 주요 공공 서비스 기관의 위탁 운영, 바우처나 대출 형태의 서비스 지원 확대 과정 등에 노동조합, 사회운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여러 방식으로 참여해 온 시간을 함께 제대로 평가해 보자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민주당으로의 참여 뿐만 아니라 원내로 진출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운동의 관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함께 연결되는 부분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많은 역량을 제도 안에서 소진시키게 되었다는 점이 현재의 난맥상을 만들었다. 의제와 요구는 대부분 법과 제도로 수렴되었고 담론은 숙성될 틈이 없이 적절히 변형된 형태로 정책이 되어 원래의 맥락과 지속적인 추진력을 잃어버렸다.

갈수록 극한 현상은 많아졌으나 노동조합, 사회운동, 시민사회 운동은 현장 연대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추동할 담론과 여론화, 조직화의 동력과 재생산 역량을 성장시키지 못했다. 지금 운동은 수위가 거의 바닥에 다다른 저수지와 같은 상태다. 새로 물이 채워지고 더 많은 생명체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밖에서 더 급진적인 시도와 새로운 대안 영역의 구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16)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 온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다. 동 연구원은 1989년에 「임금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여 노사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서구의 사회적 합의를 소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에 관한 국내의 연구와 이의 정책에의 실행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근식,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한국개발연구원, 1999.12. 4p)

2. 재생산 위기와 안티페미니즘

안티 페미니즘은 신남성연대나 이대남, 이준석의 문제가 아니다. 극우만의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진보 정당까지 포함하여 젠더 정책과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매우 협소하고 관심과 역량 또한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가족 정책과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영역에서는 더욱 그 문제가 심각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돌봄 기반을 무너뜨리고 자본이 빠르게 그 자리를 새로운 이윤 창출의 장으로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과 대안은 제도 정치와 시민사회 운동 전반에서 모두 너무 빈약하고 취약하다.

아래의 그림은 지난 6월 26일 체제전환 연구모임의 포럼에서 발표했던 토론 자료에 넣었던 것이다.¹⁷⁾

공공성 구축의 기회와 가능성을 계속해서 단절시키는 재생산 영역에 대한 국가, 자본, 극우의 개입



그림 1 공공성 구축의 기회와 가능성을 계속해서 단절시키는 재생산 영역에 대한 국가, 자본, 극우의 개입

플랫폼 노동, 헬스 케어, 재생산 기술은 돌봄과 재생산 영역의 시간과 공간, 관계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가족계획정책이 경제개발계획의 중요한 일부로서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남성 가부장 생계부양자와 그를 통한 가계 수입을 바탕으로 알뜰하고 검소하게 가정 살림을 꾸리며 한두 명의 자녀를 새로운 노동력으로서 키워내는 새로운 가족 모델과 성역할 모델을 만드는 것은 경제개발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였다. 90년대 후반 이후 남성 가부장 생계부양자의 역할은 무너지고, 남녀 모두 적절한 수준의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노동유연화에 맞추

17) 나영, 공공성과 재생산정의 운동의 전략에 대한 고민들, [작은포럼] 체제전환을 위한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 자료집, 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 2025.6.26.

어 언제든 유연하게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서의 자기계발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가족은 산업에서의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단위이자, 가족 규모를 통한 사회적 소비를 충족시킨 경제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 단위의 복지 지원과 교육, 의료, 주거 등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노동유연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가족 단위 생계부양자 모델은 유지될 수 없었기에, 남녀 모두가 다양한 불평등 조건 속에서 어디에나 끼워 맞춰질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변화가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 내 여성의 역할로서 전제되었던 돌봄과 재생산을 시장과 민간 위탁의 영역으로 재편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성역할 모델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가족 단위의 돌봄 책임 구조를 바꾼 것은 아니기에, 여성은 한편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역량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돌봄 노동을 포함한 재생산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곧 한계에 달했다. 정부 역할의 변화와 시장의 빠른 침투 속에서 돌봄과 결혼, 출산, 양육 등 재생산 영역 전반이 크게 양극화되었기 때문이다. 자원이 있는 이들은 재생산 기술과 함께 결혼, 출산, 주거 환경, 교육과 양육 지원 등 정부와 기업을 통한 가족 단위 지원의 혜택을 누리며 그에 맞춘 생애주기를 만들 수 있지만, 자원이 없는 이들은 점점 그러한 생애주기를 만드는 것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건 단지 경제적 자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로와 관계, 그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과 시간, 안전망을 지닐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자신의 삶에서 이를 구축하거나 보장받기가 어려운 많은 이들이 이제는 분투하기 보다는 포기하기를 택했다.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삶에서 가능한 수준에 맞추어 다른 부분은 포기하게 된 것이다. 한정된 자원에서 최소한 자신의 삶만이라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선택지로서 놓여 있었을 뿐이다. 결혼, 출산, 양육, 돌봄으로 이어지는 삶의 경로는 이제 누구에게나 가능하지도, 당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요구와 자신의 자원 안에서 가능한 것들을 모자이크하여 삶의 경로에 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돌봄과 재생산 영역의 공적 책임은 축소하고 여성 노동을 적절히 활용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여성의 노동과 혈연/혼인 중심 가족 단위에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정부는 어떻게든 저출생 대책의 이름으로 여성들을 관리, 통제해 보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자본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 기능하면서도 재생산 영역의 시장화에 적절히 부응할만한 소비자층 또한 필요로 하기에 헬스케어와 재생산기술, 양육 및 교육 자원의 영역은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전반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가족 모델에도, 자본이 원하는 소비자 모델에도, 여성의 내몰린 선택지에서의 모자이크에도 부합할 수 없는 많은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한편에서 여성혐오로, 안티 페미니즘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안티 페미니즘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과 소수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 전 방향에서 작

동하고 있는 일종의 제도적, 정치사회적, 정동적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를 거스르지 않는 수준에서 구색맞추기식 성평등 정책을 겨우 조금 내놓고 있는 중이다.

3. 과감한 방향 전환과 급진적 시도가 필요한 때

페미니즘 운동은 무엇을 해야할까.

1) 피해와 필요에 기반한 요구를 넘어 권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야 한다.

법과 제도에서 젠더폭력과 피해에 대한 인식을 만들고 이에 관해 신고, 처벌, 지원, 예방교육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것은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중요한 성과이며 여전히 중요하게 진전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정치와 제도가 여전히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심각한 정체를 낳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되든, 성평등가족부가 되든 이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가족구조의 변화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 검토, 보장 체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일례로 젠더폭력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노동과 주거에 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향을 운동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이다. 젠더폭력의 피해로서, 피해 이후의 과제로서 연결되는 대책으로서 보다는 젠더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안을 함께 구축하기 위한 과제로서 말이다. '여성 안심' 어찌구가 아니라 불안정 노동 구조와 노동 시간, 소득, 관계에서의 안전망,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구조 등이 어떻게 젠더폭력의 구조적 원인으로 자리하며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여성, 노동, 주거, 보건의료, 빈곤 운동 등이 함께 분석하고 새로운 권리와 대안의 요구들을 만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진행된다면 좋겠다.

2) 재생산 영역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들을 함께 파악하고 대응 전략과 대안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위의 그림에서처럼 재생산 영역은 현재 복잡한 수준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돌봄 영역에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활용하려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점, 시장화와 기술이 개별적인 관계와 생애주기의 설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점, 헬스케어와 재생산 기술이 신체와 돌봄관계, 가족관계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은 지금 논의와 분석이 시급한 영역이다. AI 또한 일자리를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돌봄 관계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다. 이미 AI는 심리적, 정서적 의존도를 높이고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비해 운동사회의 논의는 매우 더디다. 최소 50년, 6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법과 정책, 제도, 정부와 정치의 수준은 심각하게 뒤쳐져 있는 상태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양극화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고 대응의 방향을 논의하는 일, 그리고 이러한 변화속에서 새로운 관계망을 통한 돌봄과 재생산을 대안의 모델로서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논의를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3) 법과 제도의 영역 밖에서 상호 연계를 통한 대안을 시도하고 담론과 역량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법 제도의 변화가 가져오는 공식적이고 광범위한 대중적 영향을 생각할 때, 법과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앞서 짚었듯이 한동안 사회운동, 시민사회 운동이 이 영역에서 이미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했다. 새로운 대안이 논의되거나 새로운 사례, 모델을 발견/발굴하면 그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 가능하고, 어떤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실행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미처 성숙해지기도 전에 정책과 제도로 빨려들어가는 일도 많았다. 인적 역량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런만큼 운동에서의 토양은 점점 말라가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법과 제도 밖에서의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당장 사회적 합의 어찌구로 시간을 지체시키게 되는 법이나 정책의 모델이 아니더라도 실제 많은 사람들이 교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구조 안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대안과 담론을 모색하며, 우리가 직접 시도할 수 있는 상호 연계, 상호 부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가령 현재 세대에서 시도하고 있는 청소년, 이주민/난민 임신중지 지원사업의 경우 의료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 지원을 매개로 실제 청소년, 이주민/난민이 임신중지를 둘러싼 상황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성적 관계, 성건강, 원가족에서의 문제, 노동 여건, 주거 여건, 거주 지위, 생계 자원, 양육 여건 등)가 어떻게 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기관, 성폭력 상담/지원 기관, 청소년 지원 단체와 기관, 이주민/난민 단체와 관련 기관 등과 연계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함께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양성과정으로 서로의 동료를 만드는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이를 노동조합이나 다른 사회운동 단체들과, 혹은 각 지역별로도 여러 형태로 구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은 참여하는 각 주체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참여 주체도 더 다양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는 발견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담론과 의제, 요구, 대안적 체계 구축의 토대를 만들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의 시도가 다른 영역에서도 더 진행되 보면 어떨까. 말라가는 저수지에 새로운 물을 채워보자.

체제전환운동, ‘등장’에서 ‘확장’으로

박상은 | 플랫폼씨

2025년 상반기: ‘등장’에는 성공했으나 사회운동의 정치는 아직

발제문은 계엄 선포부터 조기대선 종료까지, 2025년 상반기를 포괄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는 크게 두 국면, ‘광장의 시간’과 ‘제도정치의 시간’으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국면은 각각 1) 어떻게 정세 속에서 세력으로 등장할 것인가 2) 사회운동의 활동이 제약되는 선거 시기 어떻게 사회운동의 정치를 확장할 것인가의 질문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게 했다.

좀 더 시계를 앞으로 돌려 지난 문제의식과 결의를 되짚어보자. 2023년 9월, 기후정의동맹, 길내는모임,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함께 진행한 <체제전환운동 세력화와 총선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기후정의동맹은 “2024년 총선은 사회운동이 ‘체제전환운동’으로 정치세력화하며 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치적 계기”이며 이는 “역설적이게도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정치 혐오와 냉소’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발제를 했었다. 정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냉소가 확장될 때 사회운동이 미약하게나마 정치세력으로 ‘등장’해야 하고, ‘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차제연은 토론문을 통해 ‘평등세력으로 ‘등장’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과연 총선이 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나’라는 부산지역의 지적도 타당했다. 체제전환운동의 ‘등장’, “운동진영 안팎으로의 가시화”는 우리가 준비하고 미리 예상가능했던 2024년 총선이나 2024년 3월 진행된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없이 맞닥뜨렸으며,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의 이름으로 활동하지도 못한, 윤석열의 계엄선포 이후의 퇴진 광장 속에서 비로소 온전히 가능해졌다.

지난 상반기의 투쟁이 ‘어떻게 정세 속에서 세력으로 등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준 몇 가지 답은 이렇다. 1) 냉소가 확산된 시기보다 투쟁의 확장기가 우리에게 유리하다. 새로운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주목할 때, 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체제전환의 가치도 확산될 수 있다. 2) 운동 안팎에서 ‘세력’으로 인정받는 데는 대중운동 전체를 책임지는 집행력이 필요하다. (세바넷이 명실상부 운동안팎의 세력으로 인정받은 것은 3월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 비상행동 전체의 위기감과 실무부담이 극심해진 시기 존재감을 발휘하면서였다.) 3) 동시에 체제전환운동을 하나로 묶을 독자적인 정세분석 및 입장(평등으로 신문)과 대중운동 기획(평등으로 가는 수요일)이 필요하다.

한편 ‘선거시기 어떻게 사회운동의 정치를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는 상태다. 대선으로 돌입하면서 광장의 목소리가 빠르게 삭제되어 갔으나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차원에서는 선거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다른 방식의 정치기획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조직은 광장을 이어감과 동시에 대선 이후의 과제를 환기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각자의 의제와 부문을 넘어서는 정치적 전망과 대안으로 조직”¹⁸⁾되어야 한다는 2년 전의 선언이 과연 구체화되었냐를 따져본다면, 여전히 매우 모호하다.

‘등장’을 넘어 ‘확장’하기 위해: 조직화의 구체적 전략을 세우자

발제문에서는 풀뿌리 조직화의 기반을 만들자고 하면서도, “각자의 조직 형식과 부문의 특성에 기반을 둔 풀뿌리 강화 전략”이 있고 “여기에 하나의 방법론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각자의 부문을 넘어서 체제전환으로 연결될 것, 이를 위한 기반으로 지역을 함께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당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풀뿌리 조직화를 위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풀뿌리 조직화’가 선언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에 모인 각 조직과 활동가들이 자신의 조직화 전략을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활동방식을 변경하는 시도도 해야 한다고 본다.

활동가의 입장에서 대중운동을 ‘직장·지역·학교든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체제전환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운동’이라고 보고 한국의 사회운동단체의 특성을 생각해보자. 사회단체의 조직형태와 활동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 몇몇 의제에 대해 상당한 현장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 전문가단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정규모의 회원을 포괄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1) 회원을 지역과 직장에서 활동가로 재조직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자원과 역량을

18) <체제전환운동 세력화와 총선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2023년 9월) 발제문 3쪽

적게 사용하고 (회원사업의 비중이 낮고) 2) 사회단체의 성격상, 이미 상당한 관심을 갖고 관련 의제를 탐색해왔던 적극적인 시민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운동 단체들 간에 회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꽤 있고, ‘평범한’ 사람들과의 접촉면이 넓지 않다는 약점이 있다.

극우가 교회와 같은 기존 조직기반을 바탕으로 자유마을과 같은 전국적 지역조직을 만들어 확산하고 있는 때에, 위와 같은 기존 사회단체의 활동양식으로는 극우의 확산은 물론 사회의 보수를 막기도 어렵다. 각자의 여건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1) 회원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회원들을 각자의 공간에서 체제전환운동을 벌이고 주요 정세적 투쟁에 결합하도록 재조직하는 방법. 예를 들어 플랫폼C는 ‘모두가 활동가가 되자’는 기조 하에 지역과 학교에서 회원들이 자기 대중을 조직하는 것을 독려하고, 이를 상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상근역량의 상당 부분을 투여한다. 플랫폼C 주최의 포럼과 세미나는 기본적으로는 회원들과 정세분석을 공유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원 각자의 활동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쉽지 않지만, <국민연금 가치선언>을 책임기모임에서 읽고 난 뒤 전국 대학 곳곳에서 같은 책을 읽는 사업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해보거나, 사회운동 첫발내딛기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이 이 세미나 커리를 활용해 주변인들과 모임을 만들도록 독려한다. 사회단체의 사업은 회원으로의 ‘유입’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원(혹은 비회원 참가자)들이 흠어져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즉 ‘진출’을 위한 사업이다. 사회단체가 좋은 공동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원에게 대중을 설득할 내용과 힘을 가지고 또 다른 활동을 벌이도록 용기를 주고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조직화의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적극적인 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큰 강점이 된다!) 회원들의 활동가로서의 역량이 강화되면 성공사례나 조직화 모델의 확장이 단체의 공식 사업이 아니라 지역 모임 등의 실험에서도 나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C 강원모임 성원들이 두 개의 주최단위로 켄 로치 영화모임을 진행하며 기존에 운동에 접점이 없었던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를 서울에서도 진행해보자는 제안 등이 나오기도 한다. 활동이 다채로우면서도 가로지르기 위해 일단 우리 단체에 가입해있는 회원들의 활동력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 단체의 주요 사업을 ‘조직화’에 방점이 찍힌 사업으로 이동하는 방법. 한국의 사회단체들은 자기 단체의 회원 배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노동자민중의 조직화에 기여하기 위해 상당한 역량을 쏟아왔다. 2010년대 초반 대학 청소노동자 조직화에는 노동조합과 각 대학 학생 뿐 아니라 ‘따뜻한 밥 한끼 캠페인단’이라는 사회운동연대체도 일정 역할을 했었으며, 이외에도 여러 노동조합이나 노동자협회의 조직에는 사회단체의 노력이 상당수 들어가 있다. 체제전환운동의 우군이 될 노동조합이나 지역조직의 조직화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역할에 좀 더 많은 역량을 내는 것도 방법이다.

3) 한국의 체제전환운동의 조직화 조건을 점검하고, 실험하고, 계획하기 위한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차원의 공동작업. 지역(local) 운동 얘기를 수십 년째 하고 있지만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지역 공동체는 대체로 무너져있고 지역 밀착형 운동의 성공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자유마을은 어떻게 했나? 지역 운동이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진보당은 지역에서부터 부활할 수 있었나? 왜 어떤 곳들은 구조적 어려움을 뚫고도 성공하는가. 한국에는 가가호호방문 전통은 없지만 길잃은 강아지를 찾기 위해 특정 지역의 오픈카톡방이 생기고 몇백 명이 모여서 서로 돕는 경험 같은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기도 한다. 이번 대선 이후 당근영국의 시도 등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런 사례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분석해 제도로 인해 막혀있는 조건, 그러나 주목할 수 있는 빈틈을 찾아보자.

‘등장’을 넘어 ‘확장’하기 위해: 각자의 활동을 묶을 정세적 입장을 발간하자

현재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는 이미 지역과 의제로 흩어져 있는데, 이런 다양성은 큰 강점이다. 다양한 조직과 활동가를 체제전환운동으로 묶기 위해서 그동안 조직위원회는 접점을 넓히고 서로를 잘 알도록 하는 기획에 좀 더 힘을 쏟아온 것 같다. 그러나 더 크게 모이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모이고, 긴 시간 흩어져야 한다. 흩어져 있는 활동가와 조직을 묶는 것은 체제전환운동 고유의 정세분석, 입장일 수밖에 없다. 퇴진 광장에서의 <가자! 평등으로> 신문이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한 반면, 퇴진 광장 이전에 체제전환운동 조직위가 발간한 소책자나 유인물이 그만큼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정세적 입장 발간을 강화하되, 어떤 정세적 계기에서,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입장을 통일해 갈 것인지 고민을 나눠봤으면 한다.

체제전환/운동의 가시화

- 손짓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평등의 화살표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그래서 어디인지 더욱 명확하게.

소성욱 | HIV/AIDS인권행동 알

“거리와 광장의 주체들이 지킨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일단 지켰는데, 그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나? 어디에서 누구를 지키나?": 시민들이 거리와 광장에서 수개월 간 쉽지않은 투쟁으로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회복을 주장했는데, 그 민주주의는 그래서 어디에 있나?, 그 민주주의 사회가 지키지 못하는 건 또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맥락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 - (성소수자가 민주주의를 지켰으니, 이제 민주주의가 성소수자를 지켜줘)'를 슬로건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광장이후 치러진 조기대선을 거쳐, 차별금지법이 또다시 '나중에'로 처리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허망하기까지 하다. (차별금지법 외에도 성소수자 정책과제는 수도없이 많은데 갈길이 너무 멀다) 체제전환/운동의 제시하는 다른 세상, 다른 체제, 다른 세계의 우리에는 배제되는 소수자와 약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더 힘껏 홍보되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민주주의(체제)가 지키지 못하는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여성, 청소년... 우리의 다음 구호는 무엇이어야 할까?) 체제전환/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평등에서 시작된 우리의 언어를 더 쉽고 구체적으로”: “보수 양당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추상적 비판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며, ‘평등의 화살표’ 처럼, 우리의 힘과 방향성이 ‘평등’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대표되지만, 조직사업을 위한 고민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추상적인 언어여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의제와 요구, 권리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작업까지 더 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대중부터 현실의 대중들에게 ‘평등’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설득력을 가지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의제와 요구가 - 그것이 단순한 나열일지라도 - 필요한 것 같다. 상상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

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위기의 대안은 평등이지만, 평등이라는 말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다. 권리보장의 미래, 공공성의 미래, 평등의 미래가 민생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알게하고 싶다. 보다 쉽고 구체적인 언어로 체제전환/운동을 설명하는 자료가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

“체제전환/운동이라는 친절한 지도”: 그 자료, 친절한 안내는 곧 효율과 성과, 성장과 경쟁의 가치가 사회에서 지배적인 지금의 상황을 평등의 가치로 옮겨가게 하는 가이드라인이자 지도이지 않을까? 따라오라고 투쟁하는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손짓하고 있을까? 현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목적지와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친절한 지도 -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간에 - 가 있으면 좋겠다. + 체제전환/운동에서의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 지금의 사회, 지금의 체제가 배제하는 성소수자? - 그리고 또한 동시에 체제전환/운동이 그 자체로서 지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광장에서 말해왔던 우리가 돌아갈 수 없었던 ‘일상’, 돌아가려고 했던 ‘일상’이 이 체제전환/운동과 무관하지 않음을, 아주 끈적하게 붙어 있음을 잘 보여주자. 그래서 지도를 보며 “당신도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감각과 제안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말하는 다른세계 - 함께 잘 사는 세계”: 그래서 분배, 나눔, 공생의 가치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효율, 성과, 성장과 경쟁이 민생을 안정케할 것이 아니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그런데 벌써 민생이 ‘경제’라는 말로 이미 어떤 프레임에 갇혀있다. 차별금지법도 ‘민생’을 위해 뒤로 미룬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 민생을 안정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실 그 경제성장은 우리의 성장이 아님을 우리가 제시하는 다른 세계의 ‘친절한 지도’로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면 좋겠다.

“정치혐오를 넘어, 다른 정치/세력을 느낄 수 있게”: 정치적 양극화 속, 양당정치 체제 하에 진보정치라는 선택지가 잘 보여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나아지지 않는 삶에 정치적 혐오에 기반한 무관심 혹은 정치참여가 관측된다. 매번 언급되는 ‘차악’ 이야기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정치, 나에게 이로운 정치’를 체제전환/운동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혐오 혹은 기존의 정치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을까?

“체제전환/운동의 존재감을 아주 뚜렷하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더 잘 보이게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싶다. 우리의 요구, 우리의 논리, 우리의 대안이 촘촘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렇게 촘촘하고 섬세하게 만들어낸 우리가 일단 보여야 한다. 사람들이 보고듣고 주변에서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체제전환/운동의 존재감, 역할과 필요성을 아주 뚜렷하게, 안볼래야 안볼 수 없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언제나 다른 세계를 향한 선택지를 (설사 지금은 작고 미미해보이더라도) 일단 느낄 수 있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싶다. 체제전환/운동이 더 잘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만을 두고 논의하는 작업을 더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을까? 체제전환/운동의 가시화 전략을 고민한다.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수개월 동안 광장에서 무지개존을 통해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성소수자에게도 안전한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썼다. 프라이드 플래그를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 운동의 특성 상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기도 했는데, (커밍아웃하며 발언한 성소수자 시민들도 아주 많았다) 체제전환/운동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존재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전략이 있으면 좋겠다.

“변화의 주체, 손짓하는 군중 속 한사람으로 조직하자”: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 즈음에도 본질적으로 어려운 삶, 불평등한 삶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정권을 찾게 될 텐데, “내가 김대중, 노무현도 찍어보고 이명박, 박근혜도 찍어봤는데,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누구를 뽑아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던 아버지에게 진보정치인은 선택지로 보이지 않았다. 이 현실은 왜 그런 것이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뚜렷한 체제전환/운동의 존재감, 방향성, 현재 우리가 위치한 곳을 정확히 표시한 친절한 지도가 있었다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내 삶을 바꿔줄 어떤 정치인을 기다리거나 선택하거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또 다른 인생의 선택지를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 아버지도 손짓하는 군중 속 한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때 그 ‘손짓’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실제로 어려우면 조직하기 어렵다. 다양한 레벨의 (정치)참여 방법을 설계해야 한다.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무지개존을 통해 성소수자 대중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명하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그 기회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조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을 때, 더 나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게 된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광장에서 다시 만난 세계

이김춘택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1. 탄핵 광장과 고공농성공동투쟁

2025년 6월 10일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조직의 해산은 의외로 조용했다. 일부 언론은 해산 소식을 전하며 내부 갈등과 사회대개혁 방향성 실종을 언급하기도 했다.¹⁹⁾

우리는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교체가 결국엔 다시 윤석열 정부로 귀결된 시간을 경험하면서, 광장의 투쟁이 탄핵과 새로운 정권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비상행동을 출범시키며 그 이름 앞머리에 ‘사회대개혁’을 내걸었고 ‘국민’을 삭제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동안의 노동조합운동, 사회운동, 진보정당운동의 부침은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 의존성이 더욱 커졌음을 확인하게 했다.

한편, ‘남태령’과 ‘한강진’으로 상징되는 광장 투쟁과 연대하는 주체의 발견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더욱 확장시키려는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이 지점에 ‘고공농성 3개 사업장 공동투쟁’(아래 ‘고공농성공동투쟁’)의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 프레시안, "尹 퇴진 다음은 뭐가"...사회대개혁 방향성 실종 비상행동의 속사정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1317093996749>

고공농성공동투쟁은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확보가 대통령 바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고공농성 3개 사업장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또다른 노동자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고공농성 해결을 넘어 노조법 2조, 3조 개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함을 알려주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고공농성자의 존재를 통해서, 구체적인 투쟁을 통해서 확인했다. 광장 투쟁이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이나 이론이 아니라 현실 투쟁을 통해 광장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낸 것이다.

고공농성공동투쟁이 없었다면 남태령과 한남진에서 발현된 투쟁 주체와 그 역동성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을까. 탄핵과 파면 이후에도 그 대오가 흩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을까. 고공농성 공동투쟁은 탄핵과 파면 이후에도 광장이 닫히지 않고 투쟁이 계속될 수 있는 중요한 거점과 공간을 만들었다.

그 거점과 공간에서 비상계엄에 저항하며 광장에 나온 시민과 계엄 이전부터 현장에서 투쟁해 온 노동자가 연대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었다. 연대 시민에게 노동조합 투쟁조끼와 붉은 머리띠는 멋지고 힙하고 자랑스러운 옷차림이 되었고, 투쟁하는 노동자에게는 무지개 뱃지와 무지개 머리띠가 그랬다. 광장에는 고공투쟁 3개 노동조합의 무지개색 깃발이 차례로 휘날렸다. 연대는 서로를 만나게 했고 또 상호 변화하게 했다.

2. 연대를 만들고 확장한 장면들

#1 남태령에서 온 소녀

남태령 이후에 우연한 계기로 트위터에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단식투쟁이 알려지고 그 소식이 확산되면서 며칠 동안 파업기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그런데 단지 거액의 후원금이 들어왔다는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광장에서의 발언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입금자들의 이름이었다. 남태령에서온소녀, 연대한트랜스젠더, 쿼어청년노동자, 비건페미니스트 등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51일 파업기간에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외침에 반응한 엄청난 파업기금 모금을 경험했다. 그런데 당시의 후원금이 한방향의 연대였다면, 광장식 정체성을 밝힌 이번 후원금은 그것이 일시적인 한방향 연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만남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

#2 1박2일 해맞이와 성중립숙소

남태령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들이, 후원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한해의 마지막날과 첫날에 그들을 거제로 초대했다. 설마 했는데 그 초대에 응답해 거제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일이 잘 되려고 했는지, 얼떨결에 마련한 ‘성중립숙소’가 이들에게 매우 커다란 환대로 받아들여졌다. 새해 첫날, ‘다시 만난 세계’를 들으며 조선소 크레인 사이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함께 보고, 함께 떡국을 나눠먹고, 투쟁가에 맞춰 차례로 몸짓 배틀을 하고, 둥그렇게 둘러서서 자유발언을 하고... 그 시간이 지금도 참 따뜻한 연대와 환대의 시간으로 기억된다.

#3 말벌의 탄생 - 한화본사 앞 밤샘 연대

일주일 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서울 장교동 한화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한화본사 앞 농성은 탄핵 광장에 적극 결합해 사회적 연대를 더 크게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투쟁을 승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역시 의도하지 않는 상황이 그 목표를 급속하게 진전시켰다. 한화는 농성장에 텐트를 치지 못하게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휘둘렀고, 거제에서의 환대에 응답하기 위해 농성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의해 SNS에 그 소식이 알려지자 연대자가 즉각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새워 발언하며 노래하며 농성장을 지켰다. 이날을 계기로 이른바 ‘말벌’이라고 불리는 시민이 거통고뿐만 아니라 투쟁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기 시작되고 그 연대는 지방으로, 더 작은 투쟁사업장으로 확산되었다. 서울에서 농성하는 거통고 조합원들도 목적의식적으로 전장연, 세종호텔, A학교공대위 등 투쟁현장에 적극 연대했다.

#4. 무지개조선소와 연대투쟁호

거통고는 2016년 조선업 불황기 대량해고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희망버스’를 조직했고 3천 명 넘는 시민의 모금으로 ‘고용안정호’를 만든 바 있다. 2018년 박근혜 탄핵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던 날, 울산-목포-거제 조선하청노동자가 또다른 고용안정호를 만들어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진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탄핵 광장에 띄울 배를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전의 고용안정호는 파견미술팀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사정상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장의 방식으로 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무지개조선소’ 프로젝트를 진행해 ‘연대투쟁호’를 탄핵 광장에 띄웠다. 무지개조선소 프로젝트는 광장 시

민과 투쟁하는 노동자가 만나는 또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연대투쟁호는 거통고 투쟁을 알리는 것을 넘어 그 만남을 담아낸 상징물이 되었다.²⁰⁾

연대투쟁호의 한쪽에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꾸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라는 구호를 썼다. 광장에서 외친 가장 중요한 구호가 연대투쟁호에 담긴 것이다. 처음부터 뚜렷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연대투쟁호를 함께 만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이자 판단이었다.

#5. 퀴어 퍼레이드

연대투쟁호를 만들 때부터, 그 마지막은 퀴어퍼레이드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데 무지개조선소 프로젝트가, 고공농성공동투쟁과 광장 시민의 연대가 그것을 진짜 현실로 만들었다. 고공농성 3개 노동조합은 함께 2025년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에 퀴어퍼레이드 신청을 했고,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고맙게도 퍼레이드 차량을 내어주고 그것도 1호차에 배치해 주었다. 그래서 퀴어퍼레이드의 제일 앞에 고공농성공동투쟁의 차량이 섰고, 고공투쟁 3개 사업장 요구를 새롭게 담은 연대투쟁호가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퍼레이드 차량과 연대투쟁호 뒤를 따라 수많은 개인 기수들이 깃발을 함께 휘날리며 행진했다. 노동조합이, 그것도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광장에서 함께 투쟁해온 시민들이, 광장에 휘날렸던 깃발들이 같이 참여했기에 더욱 뜻깊었다.

3. 새로운 만남, 확장되는 연대 - 세 가지 바람

남태령과 한남진에서 등장한 새로운 주체,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와 만나서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연대. 이 만남과 연대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길 바란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바람이 있다.

하나, 거통고는 다행히 고공농성이 잘 마무리되었으나 오피칼과 세종호텔은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법, 고공농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금 고공농성공동투쟁에 연대를 집중하자. 고공농성공동투쟁은 여전히 광장 이후를 지속하게 하는 주요 거점이자 공간이다. 그리고 고공농성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것은, 투쟁하는 노동자와 광장 시민의 연대가 이후에도 계속되고 확대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20) 무지개조선서와 연대투쟁호에 대해서는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의 제작 지원을 받아 ‘스튜디오R’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

둘, 차별금지법 제정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다시금 연대와 투쟁을 기획하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비롯해 윤석열에 의해 가로막혔던 여러 법안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나중’으로 미뤄지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할 구심력은 잘 모아지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보다 적극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전면적 결합이 아니더라도,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연대한 투쟁하는 노동자가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에 적극 결합하는 기획이 꼭 필요하다.

셋, 광장 시민과 투쟁하는 노동자와 기후정의운동의 만남을 기획하자. 퀴어퍼레이드에 고공농성 공동투쟁 차량과 연대투쟁호와 광장의 깃발들이 함께 행진했던 것처럼, 기후정의행진에 기후활동가와 투쟁하는노동자와 광장의 시민이 함께 행진할 수 있도록 조직하자. 퀴어퍼레이드에 휘날렸던 광장의 깃발들이 기후정의행진에서도 휘날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4. 첨언 : ‘체제전환’ 과 ‘평등’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 ‘기후정의가 당연한 사회’를 위한 체제전환조직위의 투쟁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 여러운동의 가로지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공공성’에 대한 주목에도 공감한다.

그런데 이 운동이 지향과 방향을 담은 단어가 ‘체제전환’과 ‘평등’이어야 하는지는 아직 혼쾌하지 않다. 왜 혁명이나 사회변혁이 아니고 반자본주의도 아닌 체제전환인지 여전히 모호하다. 평등이 보편적 단어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위기 시대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여기’에 꼭 필요한 단어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념은 그것이 비판하는 현실과 지향하는 미래가 명확하면 할수록 그것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행동하게 하는 현실적 힘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념은 아직 허약하다. 이념으로서의 온전한 힘을 가지지 못했다.

종합토론

2부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2차 전체회의

체제전환운동으로 스스로를, 동료들, 운동을 조직하는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2차 전체회의

2025년 7월 12일(토) 오후 3시 30분 |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지하1층 명례방

보고1. 조직위원 가입 현황

보고2. 주요 활동

보고3. 팀별 활동

보고4. 재정 보고

논의1.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사업 계획

논의2.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집행구조

[보고1] 조직위원 가입 현황 (~7/9)

단체 50개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노동해방 마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연합당 준비위원회, 동국대학교 맑스철학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동당(정의당),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빈고,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삶과 노동을 잇는 배움터 이짓, 시민건강연구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대를 위한 사회주의자 결집, 옥바라지선교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잠수함토끼컬렉티브, 전환,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직접행동영등포당, 진보 3.0, 진보네트워크센터, 책방토닥토닥,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체제전환부산모임, 체제전환을 향한 경상국립대현장모임,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탈시설장애인당, 플랫폼c,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화폐민주주의연대

개인 110명

[보고2] 주요 활동

1. 가자! 체제전환 공동행동

1) 총평

- 조직위 내에서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견해 바탕으로 추진. 정세적으로도 윤석열 퇴진 구호 나오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체제전환 바라는 사회운동이 어떤 지향으로 어떤 목소리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밀거름이 됨.
-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의 조직적 상황과 부족한 역량을 확인했음. 노동자대회에 매년 가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는 상황. 조직위 내 다양한 단위들의 활동

사이클이 제각각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동행동'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었음. 노동자 대회 참가 동기를 더 확인하는 게 필요했으나, 불충분했음. 9~10월 실천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 썼다면 어떤 단위들이 더 참가하고 또 없는지 파악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집회 제목을 '전태일 정신, 평등을 향해!'라고 잡아 기초를 확인함. 그러나 올해 노동자 대회 참가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다소 부족했음. 노동자대회에 참가하는 게 핵심이라기보다는 하반기 정세에서 몸을 움직이는 실천이 필요했던 것을 보다 폭넓게 공유했다면 좋았을 것임. 안에서도 서로를 확인하고, 밖에서도 '재네 뭐 좀 하네'를 더 많이 드러낼 필요가 있음.
- 얼마간 상기한 목표가 실현되기도 함. 워크숍 기획과 유인물 제작, 릴레이 기고 과정에서 정세를 고민하고 살피는 계기가 되었음. 또, 하반기 정세 흐름에서 자유주의 세력에 묻어가는 '윤석열 퇴진' 구호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있음을 드러낼 수 있었음.

2) 구체 평가

(1) 워크숍

- 워크숍을 기획해 '윤석열 퇴진' 등에 대해 토론 기회를 가졌던 것은 '잘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지금 조직위가 단단한 덩어리는 아니라서 뾰족하게 개입할 순 없었지만, 계속해서 지금 정세에서 다른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운동임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됨.

(2) 체제전환 공동행동 집회까지의 흐름

- **집회 참여** : 일련의 투쟁 일정(907 기후정의행진, 9.28 정권퇴진 시국대회, 10.5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행동의 날, 1017 빈곤철폐 퍼레이드, 11.2 학생의날 집회)에 대한 결합, 11월 9일 노동자대회 사전집회를 통해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의 실천과 역동성을 확인하고자 했고, '가자, 체제전환 공동행동'이 무엇이고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알리고자 노력함.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겠으나 욕심만큼 충분히 알리는데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 **부스 운영** : 다섯 차례에 걸친 규모 있는 집회들에서 체제전환운동 조직위 부스를 운영하고, 집회에 함께 참여. 이를 통해 팸플릿 등을 판매/배포하였고,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의 존재와 목소리를 알리고자 노력함.

- **팜플렛** : ‘가자 체제전환 공동행동’ 팜플렛 배포를 통해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의 정세적 관점과 요구를 알리고자 했고, 배포도 충분히 하면서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3) 체제전환 사전집회에 대한 평가

- **참가 조직 관련**
 - 참가 인원 약 200명.
 - 체제전환공동행동을 조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관련 선전/홍보 등 사전 작업에 좀 더 역량이 투입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웠음.
- **집회 준비 및 진행**
 - 적은 예산, 제한된 준비 기간, 매우 촉박한 집회 및 행진 시간 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음.
 - 팔레스타인 연대 발언과 지역에서의 체제전환운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발언 내용이 가장 좋았다는 평가가 여럿 있었음.
 - 집회 중 앰프의 지향성이 강해서 그런지 집회 참가자들이 자리에 앉아 앰프 레벨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을 때 예상보다 볼륨이 작게 들렸음.
- **행진 및 구호**
 - 행진 구호와 슬로건이 행진을 활기치게 해서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음.
 - 구체적인 요구들을 상기할 수 있는 끝구호들을 배치하고, ‘자본주의 내려’는 임팩트있게 던졌으면 더 좋았을듯한데, 끝구호 ‘자본주의 내려’를 너무 자주 반복해 오히려 루즈해졌다는 의견도 존재.
 -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다만 3개 산별노조 행진 대오에 늦지 않게 붙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스피디하게 진행됨. 결과적으로는 노조의 행진 출발이 딜레이되면서 훨씬 여유롭게 진행했어도 좋았을텐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측면이었음.
 - 3개 노조 행진에 ‘가자, 체제전환 공동행동’ 행진이 합류하는 것이 대오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음. 실무자를 넘어 조직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상호 확인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좀 더 탄탄한 준비가 필요했었을 것으로 보임.

(4) 선전홍보 관련

- <가자, 체제전환! 공동행동> 주요 일정 알림 카드뉴스, 사전대회 제안서와 참여 인증

샷 등 온라인 선전 활동을 적극 펼치고, 집회 현장에서는 사전대회 현장 세팅, 머리띠, 장갑 등 선전물을 제작함.

- 릴레이 기고가 조직위원회 내에서 충분히 공유됐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남음. 하지만 동시에 릴레이 기고를 통해 '가자, 체제전환 공동행동'의 취지와 목소리를 알리고, 운동의 과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함. 참세상 내부적으로는 다른 글들에 비해 조회수가 좀 더 나왔다는 이야기도 공유됨.
- 기후정의행진과 9.28 집회 2차 유인물을 배포했고, 노대회에서는 별도의 체제전환운동 조직위 유인물 6천부를 빠짐없이 배포하였음. 유인물 내용에 정세적인 입장을 최대한 담아내고자 함.

(5) 기타: 전국노동자대회 평가 관련

- 여러 사회운동들의 결합과 연결은 자연스러웠으나, 노동조합 집회와 사회운동의 결합은 이전보다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짐.
- 올해 노대회에 대한 평가가 매우 비판적인 상황에서, 체제전환운동 조직위가 사전집회를 통해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갖고 참가한다'는 것을 확인. '전태일 정신'을 해석하고, 체제전환의 방향을 내고자 한 것은 너무 다행.
- 조직된 노동자들과의 유기적인 연대와 연결을 어떻게 도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체제전환운동 차원의 고민 필요. 나아가 노조 차원에서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조직노동의 실천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3) 향후 공동 실천의 방향

- 사회운동의 주장을 알리기도 하고, 노동자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이질감 속에서 서로 배우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우리 안의 접점을 점점 더 넓힐 필요가 있음. 향후 공동 실천 투쟁은 짧은 호흡으로 기획하면 안 될 것.
- 조직위 자체의 별도 사업을 만드는 방식은 지양하되, '공동 실천'의 양식을 보다 다양하게 기획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함. 서로의 위치와 목표, 지향을 공유하고 합의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과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2025 체제전환운동포럼 승리하는 광장을 향해

1) 개요

- 제목: 2025 체제전환운동포럼, 승리하는 광장을 향해
- 일시: 2025년 2월 7일 (금) 10:00~19:00
- 장소: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강당 (환일길 13)
- 참석: 약 140

2) 일정

시간	제목	내용
10:00~10:30	환영인사 (기조발언, 연대사)	• 사회: 지오 • 2024년 한해를 돌아보는 영상 • 발언: 홍명교(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 축사: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 축사: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 지회장)
10:30~12:30	[포럼1] 광장과 페미니즘	• 사회: 몽(인권운동사랑방) • 발제: 오매 (한국성폭력상담소) • 토론: 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토론: 권수정 (민주노총) • 토론: 김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12:30~13:30 점심시간		
13:30~16:30	[포럼2] 2025년 정세전망: 평등을 쟁취하는 광장의 과제	• 사회: 박상은 (플랫폼씨) • 발제: 미류 (체제전환운동조직위) • 토론: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 체제전환운동조직위 연구모임) • 토론: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본부) • 토론: 강문식 (아래로부터의전북노동연대) • *발제와 토론, 플로어토론, 모둠토론을 진행
16:40~19:00	평등을 향한 연대의 장	• 사회: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민희(플랫폼씨) • 발언: 레빗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발언: 김현정 (체제전환충북모임) • 발언: 박정안 (공공운수노조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 모듬토론 결과 발표: 선지현 (체제전환연구모임) • 나만의 깃발만들기, 깃발자랑 자유발언 • 간단한 뒤풀이

- 부대행사 <우리의 말은 우리의 무기다>
: 나를 무너뜨린 말, 나를 일으켜세운 말 쓰기

3) 평가

- 이들의 포럼을 기획하였으나 매주 토요일 열리는 전국의 퇴진집회를 활동가들이 기획, 집행,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금요일 하루 포럼을 개최함. 2025년 정세전망에 관한 토론(포럼1), 광장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토론(포럼2), 모듬토론 및 여는 행사와 닫는 행사를 계획함.
- 포럼1은 포럼 3주 전 급박하게 기획되었음.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하는 주제'라는 판단아래 기획하였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덕에 진행할 수 있었음. 광장과 페미니즘이라는 주제어 아래 계엄 사태의 의미, 폭주하는 남성성의 진화, 대항담론의 필요성, 조직화까지 중요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었음. 지난 2024포럼처럼 각 세션별 기획팀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발제 토론자 모두 급하게 문서를 준비해야 했고, 토론 주제가 광범위하다보니 플로어의 고민 역시 다소 산발적이었다는 평가 있음. 그럼에도 몇가지 중요한 문제의식(페미니즘이 기본값인 문화(연극, 뮤지컬 등)산업이 있는 반면 반대가 기본값인 문화(유튜브, 아프리카티비) 사이의 격차가 큰 현실에서 누구를, 어떻게 조직해야하는가? 등)을 공유하는 등 의미 있었음.
- 포럼2는 체제전환운동포럼의 뼈대가 되는 포럼으로, 체제전환운동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한 해의 정세를 확인하고 공동의 태세를 준비하기 위한 토론. 무엇을 해야할지 누구도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의 고민을 엿보고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평가 많음. 플로어 토론에서 모듬토론으로 이어지며 포럼 1과 2에서 이어온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의미있었음. 질문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서로 듣고 말할 시간'이 이 시국을 나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다는 피드백.
- 여는 행사와 닫는 행사, 부대행사는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광장의 경험을 환류하고, 다시 싸워나갈 힘을 북돋는데 목표가 있었음. 각 행사 사회자들의 힘찬 진행,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 등이 이를 도움.
- 운영과 관련,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들과 개인 조직위원 두 분이 결합하며 사전 준비 원활히 마칠 수 있었음. 당일 운영에는 촉진위원들을 비롯해 선전팀, 조직팀에 결합중인 조직위원들의 능수능란한 집행능력에 기댔음.
- 전체적으로 급한 일정, 제한적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획을 해냈음. 실용적으로 기획하다보니 기획팀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모듬토론 시간을 훨씬 길게

배치하자 등)를 소화하지 못한 아쉬움 있음. 더불어 2025 체제전환운동포럼에서는 ‘조직화’를 화두로 크고 작은 이야기의 열개를 만들자는 목표 있었는데(소그룹 포럼 동시 진행) 진행하지 못함. 주중에 진행하다보니 노동조합 활동가 및 지역 참여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어려웠음.

- 급한 상황, 혹독한 폭설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높았던 것은 체제전환운동 활동가들이 서로에게 거는 높은 기대의 반영이 아닐까? 앞으로도 모여서 토론하며 서로의 경험을 ‘가로지르길’ 바람.

3.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1) 세바넷 구성까지

-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는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12월4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함. 정세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며 윤석열 퇴진을 넘어 다른 미래로 나아갈 세력을 드러내는 투쟁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 12월 6일 <[윤석열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도, 우리 힘으로 바뀔시다](#)> 입장 발표. 이후 윤퇴진운동본부와 거부권거부행동이 폭넓은 연대체 제안 준비 중임을 확인하고 비상행동에 참여하기로 함. 동시에 12월 11일 <윤석열 퇴진 투쟁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흐름을 만드는 공동대응 모색 간담회>를 열고 독자적 흐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단위들과 의견을 나눔.
- 조직위가 제안한 간담회와 별개로 12일 3당이 주도하여 열린 조찬모임에서 비상행동 참여와 별개로 다른 흐름을 만들어갈 필요성이 공유되며 (가칭)사회대전환네트워크라는 이름의 텔방이 만들어짐. 두 네트워크가 통합해갈 방안 마련 필요. 18일(수) 오전 네트워크 구성 위한 기획회의 진행.
- 12월 18일 열린 촉진위 4차 회의에서, 긴급 전체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공동대응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통한 공동대응체계에 집중하는 것을 논의함. 네트워크에 우선순위를 두되 네트워크 차원의 비상행동 참여가 원활하도록 공동조직위원장 미류를 비상행동 공동대표로 추천하기로 함. 이후 윤석열 퇴진 투쟁은 세바넷을 통한 독자적 흐름과 비상행동 참여를 통해 이루어짐.

2) 세바넷 활동 보고

(1) 세바넷 구성과 운영

1-1) 구성

- 12월 20일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구성 : '세상을 바꾸는 공동대응 + (가) 사회대전환 네트워크'
- 목표 : 퇴진 투쟁 과정에서부터 다른 흐름 만들자, 대중적 힘 조직하며 대안적 세력화 모색하자, 비상행동 역할에 협력과 견제를 공동으로 하자
- 사업방향 : 공동의 광장, 매체, 담론 만들고 참여행동 조직하며 지역을 적극적으로 고려.

1-2) 운영

- 전체회의 : 참여단위 전체가 참여하여 정세토론 및 계획 논의. %, 1/24, 2/21 세 차례 열림
- 기획회의 : 주요단위가 사업 기조와 방향 토론. 12/23. 1/22, 2/19, %, 4/1, 4/10 . 비상행동 관련 구체적 논의는 네트워크-비상행동 텔방 운영하고 부정기 회의.
- 세바실(세상을 바꾸는 상황실) : 상시 운영. 평등수요일팀, 매체팀, 참여행동팀, 담론팀. 주 1회 팀장단 회의. 이후 사업 추진되면서 평등공론장팀, 3.29행진팀 등 구성.

(2) 세바넷 주요 활동과 약평

2-1) 집회

-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 12월 25일 시작으로 3월 12일까지 10차에 걸쳐 주중 집회/행진 진행.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법 2,3조 개정, 성소수자 권리, 임신중지 권리, 기후 정의, 성평등, 장애인 차별 철폐, 공공성 등 다양한 의제와 요구. 주말 집회 참여와 주중 집회 개최를 병행하는 물리적 어려움에도 여러 주관단위와 함께 안정적으로 집회를 열고 평등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생강청 후원을 받아 재정 마련에 큰 도움이 됨.
-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 3.12 인권시민사회단체 긴급 집회 추진. 이후 광장노래자랑 등 사업 진행. 3.26 서울 차량 순회연설회 3.27 평등시민총파업을 추진. 가자! 평등으로 3.29 민중의행진 성사. 긴박한 정세에서 앞선 경험들이 기반이 되어 기민하게 대응하며 대중을 조직하는 계기가 됨. 광장에서 '평등'이 더욱 부각되고 비상행동 안에서도 주요한 세력으로 인지되는 계기.

2-2) 매체와 담론

- 신문 <평등으로> : 12월 21일 1호 시작으로, 4월 5일 14호까지 발행. 8호(2월 15일) 부터 양면 1장짜리로 전환. 비상행동 기조에 갇히지 않는 정세분석과 입장을 전달하는 유의미한 매체로 기능. 지역 운동들과 연계되어 전국 동시다발 배포가 이루어지고 지역에서 다른 흐름을 만들어가는 촉매제 역할.
- 담론팀 : 세바넷 차원의 담론 생산 위한 팀 구성. 4월 28일 <광장을 넘어 체제전환, 세상을 바꾸는 토론회> 열어 총론 및 시민주권-존엄과평등-기후정의 를 키워드로 하는 담론 제출하고 토론. 다양한 운동 단위들이 이견을 조율하며 담론을 생산한 성과.

2-3) 참여행동과 공론장

- 참여행동팀 : 비상행동 주말 집회에서 대중과 사회운동을 연결하는 사업. 12월 3차의 '소원을 말해봐', 1~3월 5차의 '세상을 바꾸는 질문의 벽' 무대 외 광장의 이야기를 모으는 작업.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록 기증.
- 평등으로 가는 풀뿌리 공론장 : 극우 발흥 정세에 주목하며 2월부터 추진했으나 3월 구속 취소 사태로 지속 어려웠음. 11곳에서 진행한 것으로 파악. 퇴진광장의 전체 공론장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었고 여러 단위에서 각자의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됨.

2-4)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결합

- 비상행동 구성 논의부터 개입하며 공동의장/공동대표/공동운영위원장 및 상황실 행진 기획팀, 정책기획팀, 시민참여팀에 참여. 사회대개혁 특위 소위원회 및 공동위원장단 참여. 각급 회의에서 비상행동 기조와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한 투쟁에 헌신적으로 결합. 주말 범시민대행진에 대오를 형성해 참여하기도.

(3) 세바넷 재정 결산

- 세바넷 재정 관리를 위해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계좌를 임시 사용.
- 총수입 41,748,877원 (참여단위 분담금 및 생강청 판매 등 후원)
- 총지출 37,180,715원 (평등으로가는수요일, 327시민총파업, 329민중의행진 등)
- 재정 잔액은 현재 다른 통장으로 옮겨 12월 집회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함.

3) 세바넷 활동 총평

(1) 평등으로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와 신문 <평등으로> 배포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벌이며 윤석열 퇴진 투쟁의 한 흐름을 만들었다. 광장에서 평등수칙이 만든 효과, 주요 투쟁 현장에서 환대와 연대의 흐름과 접속할 수 있었다. 계엄 이후 열린 광장에 나온 대중의 요구와 접속하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진단하는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극우가 부상하는 정세에서 혐오에 맞서고 그 토양이 되는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자는 기치로 평등을 각인시켰다.
- ‘윤석열들 없는 나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하고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의 세력을 형성했다. ‘가자 평등으로’가 실제 있는 세력의 말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내용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는 여러 운동이 자신의 요구를 평등으로 연결시키며 운동을 복돋는 계기가 되었다. 광장에서 가시화되거나 주목되기 어려운 의제들도 있었으나 평등과 민주주의로 서로 연결할 수 있었다. 광장 이후, 새로운 정부에서 평등으로 가는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2) 공동 실천의 경험을 만들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박근혜 퇴진 당시와 다른 윤석열 퇴진 투쟁을 만들어가자는 공감대 속에서 세바넷이 구성되었다. 비상계엄이 만든 정세에서 광장의 요구가 정권 교체에 갇히지 않도록 함께 정세 인식을 맞춰가며 공동 실천을 벌였다. 사회운동과 정당운동, 노동운동이 정세적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었다.
- 각 운동의 경험이나 속도, 집행역량의 편차를 고려하는 역할 분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서로를 연결하며 협업의 경험을 쌓았다. 운동의 방향이나 기획에서 세바넷이 기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평등수요일 집회 등으로 쌓아온 역량이 윤석열 구속취소 이후 국면에서 잘 발휘되어 ‘평등’을 앞세우는 새로운 세력이 있음을 대중적으로도 알릴 수 있었다.
- 활동을 벌이는 동안 비수도권 지역 운동과 연결될 수 있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고민과 경험이 세바넷에서 충분히 환류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지역에서 광장을 촉진하고 이어가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목표와 상을 맞추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 세바넷 목표에 대한 공감대 안에서 참여 단위들마다 광장에서의 가시화, 비상행동에 의 전략적 개입, 사회대개혁 중점 과제 제기, 대안적 세력화 등 다양한 기대가 있었다. 구체적인 목표와 상을 맞춰가며 활동의 지향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토론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며 구심력이 약해졌다. 각 단위마다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세바넷은 여러 단위가 각자의 기대를 싣는 울타리가 되었으나 다양한 기대를 조정하며 실현해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금씩 다른 목표나 경험을 가진 운동들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직하려는 노력과 평상시에 접점을 넓혀야 할 필요 등이 확인되었다.

(4) 운동진영 안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각인되었다

- 세바넷은 제 운동 단체들이 모인 비상행동 안에서 ‘평등’을 강조하고 민주당과의 연합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며 독자적인 대중운동의 중요성을 말하는 세력으로 인지되기 시작했다. 세바넷의 규모나 역량이 제한된 조건에서 비상행동의 각급 논의-실행 단계에 역량을 냈고,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뿐만 아니라 비상행동의 주요 투쟁을 함께 책임지면서 역량과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받았다.
- 세바넷으로 움직이면서 비상행동을 “조금 더 왼쪽으로 견인” 하는 역할을 하며 운동 전반에 자극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표결이 강행되는 상황에서 수적 열세도 확인되었다. 비상행동 주요 논의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정보와 의견을 교류하며 입장을 맞춰갈 수 있었으나 전략적 개입이 부족하여 목표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사안들도 많았다. 비상행동 내부에서 역할을 하는 소수 활동가에게 과도한 부담이 실리기도 했다.

(5) 거대 양당 구도에 포획되지 않을 세력화의 과제를 남겼다

- 세바넷의 경험은 여러 운동이 하나의 세력으로 가시화될 때 서로 자신감의 근거가 되고 대중적 설득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 공동실천의 경험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후로도 서로가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도 모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각 운동의 고유한 과제를 서로 이해하는 토대에서 공통의 과제를 구성하기 위해 서로 설득하고 조직하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세바넷으로 모인 단위들이 대중운동의 토대를 별로 갖추지 못한 점도 정세에 주도적으로 개

입하는 데 어려움으로 확인되었다.

- 윤석열 파면 이후 정치의 위기 속 극우 확산이 여전히 우려되고, 민주당의 신자유주의 정치에 운동진영이 포섭되며 분별되지 못할 우려도 높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수식하던 존엄과 평등은 벌써부터 지워지기 시작했다. 가자 평등으로'를 외쳤던 운동들은 광장의 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전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국적 운동을 건설해갈 수 있을지 모두의 숙제로 남아있다.

4) 세바넷 이후 제안

(1) 제안 준비 논의 경과

- 2월 21일 세바넷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파면 이후 진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세바넷 유지가 어려운 조건을 확인하고 공동실천의 경험을 이어가는 향후 활동은 다양한 방식과 구성을 열어놓고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논의는 기획회의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 3월 5일 기획회의에서는 세바넷 이후 여러 운동이 연결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진보3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과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가 논의하여 제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4월 윤석열 파면 이후 위 단위와 소집권자로 추가 선임된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 5월 7일과 6월 6일 두 차례의 논의를 가졌다.
- 세바넷은 정세에 대응하는 한시적 연대체로 구성되었으나 운동진영 안에서나 한국사회에서 다른 세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로 다른 운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차이를 발견하며 서로 배우고 기대는 공동실천의 경험을 남겼다. 이러한 값진 성과가 느슨하더라도 상시화된 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는 동시에 이와 유사한 틀이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로 있다는 점 사이에서 방안을 논의했다.

(2) 제안

- 대선을 거치며 이재명 정부의 기초가 드러났다. 신자유주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전유하며 평등을 지우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중이 극우 정치로 조직되거나 냉소와 실망을 반복하지 않도록 평등으로 가는 운동을 키워가는 일이 계속되어야 한다. 성평등과 인권, 노동의 존엄과 권리, 기후정의 등 광장에서 분출된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연대의 필요성은 상존한다.

- 그러나 세바넷의 경험과 이후 대선에서의 경험을 반추할 때 서로 다른 운동이 모이는 것만으로 공동의 지향과 전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연대의 틀보다 정세토론과 각 운동의 지향을 소통하는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가며 공동실천의 경험을 이어가는 노력이 우선 필요해보인다. 세바넷의 경험과 관계는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에 결합하는 방향으로 이어가며 사회운동과 노동운동, 진보정당운동이 무언가 함께 도모하는 경험을 만들어가기를 제안한다.
- 그 첫걸음으로 12월 비상계엄사태 1년이 되는 즈음 세바넷에 함께 했던 단위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을 제안한다. 광장으로부터 이어진 존엄과 평등의 민주주의가 여러 운동의 요구와 투쟁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며 이재명 정부와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를 해소하고 재정 잔액 4,568,208원은 12월 집회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3) 세바넷 해소

- 4월 26일 세바넷 전체회의에서 위 평가와 제안을 논의함. 세바넷을 해소하기로 하고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가 여러 운동을 연결하는 구심 역할을 이어가기로 함.

[보고3] 팀별 활동

1. 선전팀

1) 구성과 목표

- 참여자: 몽, 은혜, 진영, 낙타(달별), 명교, 운영
- 조직위원회와 조직위원회의 행사와 주장을 선전한다.
- 조직위원회 참가자들의 참여 활성화와 소통, 조직화를 위한 선전물을 발행한다.
- 조직위원회 활동 기록을 아카이빙한다.

2) 할일

- 대내외 선전물 제작 (포스터, 브로셔, 뉴스레터 등)
- 홈페이지, SNS관리
- 행사장 선전 기획
- 영상 및 사진 기록, 포럼별 후기 발간
- (필요시) 보도자료 등 발간

3) 뉴스레터 발간목록

	읽어드림	가로질러 (조직위원소식)	구석구석체제전환 (지역소식/비정기)	알려드림
24년 8월	윤석열정부 저출생, 인구대책	전체회의 회의록공유		아맛다 분담금!
9월	공공재생에너지	수다회후기(주거권)		기후정의행진부스 놀러오세요
10월	방산/군축	윤석열퇴진집회 부스 운영후기	충북노동자기후정의 행진	양말사세요!
11월	학생인권보장	수다회후기(노동조합 활동가)	가자, 체제전환공동 행동 기고글 모음	전태일정신, 평등을 향해. 가자, 체제전환! 인증샷 모아요
12월	홈리스	수다회후기 (사회운 동과 법)	가자, 체제전환공동 행동 부산모임 후기	체제전환운동포럼 홍보
25년 1월	<평등으로> 1면으로 대체	평등으로 가는 수요 일 집회준비 후기	전북모임 파란님 발 언문 공유	체제전환운동 조직위 정세포럼
2월	상동	정세포럼후기	평등으로 배포팀 후 기	체제전환운동포럼: 승리하는 광장을 향 해
3월	상동	체제전환운동 포럼 후기	원주 <켄로치 월간 감상회>	평등으로 가는 풀뿌리 공론장
4월	상동	3.29행진 후기	음성 노동인권센터 생활임금제정 조례	
5월	조기대선 분석	광장을 이어갈 목소 리 모음(청소년, 이 주, 기후)	퇴진너머 평등으로 충북포럼	세바넷 평가 집담회

	읽어드림	가로질러 (조직위원소식)	구석구석체제전환 (지역소식/비정기)	알려드림
6월	2025체제전환 평가-전망 토론회 소개	정의로운 전환을 위 한 대행진(태안) 동자동 참가단 인터 뷰	제주 차별철폐 대행 진 후기	체제전환 평가-전망토론회
7월	노동안전보건운동	체제전환 연구모임 '공공성의 탈환과 재 구성' 작은포럼 후기	조진님 인터뷰	7월 12일 토론회/전체회의 홍 보

4) 평가

- 뉴스레터 발간과 홈페이지, SNS관리와 시시때때로 있었던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의 선전 계획을 기획하고 집행함.
- 뉴스레터의 '읽어드림' 코너는 2024년 체제전환운동포럼 이후 '체제전환운동의 언어가 추상적이거나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만들어졌음.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체제전환의 시선으로 읽어보고, 체제전환의 관점을 대중화하기 위한 작업을 쌓아가기 위해.
- 전국 조직위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인터뷰 코너가 가장 반응이 좋았음. 9월부터 '구석구석 체제전환'을 추가해 지역 소식 코너를 별도로 만들.
- 헌신적인 선전팀원들의 노고로 잘 집행해왔으나 일상적인 사무가 적지 않아 피로도가 상당히 쌓인 것도 사실. 역량을 집중하고 분산하는 흐름을 잘 조직하고, 홈페이지 관리 등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활동가의 역할이 두루두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갈 필요성 있음.

2. 조직팀

1) 목표

- 1. 조직위원들의 일상적인 연결과 실천의 계기 마련
- 2. 단체, 개인 조직위원회 가입 촉진

2) 역할

- 일상의 사업과 활동을 통해,

- 1. 조직위원들이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계속 모일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 2. 서로의 운동을 가로지를 수 있는 실천행동을 제안하고 조직한다.
- 3. 다양한 단위 및 개인이 체제전환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 합류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3) 활동

- ‘대놓고 체제전환’ 수다회
 - 24년 8월 28일: 집도 결혼도 특권이라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사랑하지?
 - 24년 9월 24일: 성매매산업을 해체해나가는 운동이자, 성판매여성 인권 운동은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
 - 24년 10월 24일: 체제전환운동 활동가가 노조에서 꾸는 꿈.
 - 24년 11월 28일: 법 오조오억개 만든다고 세상이 바뀔까
 - 12월 수다회 기획 중 계엄 사태 맞이 함
 - 25년 5월 26일: 21대 대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모든 것들에 관한 속풀이 수다
- 수다회를 통해 운동사회 내에서 다뤄보지 못하거나 다른 운동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주제들을 꺼내어 이야기 나누며 현재 운동의 고민들을 풀어보고 체제전환운동과의 접점을 조금씩 넓혀감. 일상활동으로서 1년정도 꾸준히 이어간 후 그 추이를 평가하면 좋을 것 같았으나, 수다회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을 때쯤 계엄사태를 맞아 흐름이 끊긴 데 아쉬움이 있음.

3. 연구모임

1) 연구팀의 역할

- 체제전환운동의 방향을 버리는 활동
- 체제전환운동의 담론과 전략을 조직하기 위한 내용 연구 및 공론화

2) 과제

- 확장된 자본주의 체제 비판과 분석과 대안체제 전망
- 한국 사회 주요 문제(운동)에 대한 분석과 담론 마련
- 체제전환운동의 공동인식-공동실천을 쌓기 위한 정세 분석과 토론

3) 구성

- 공성식, 김선철, 나영, 미류, 선지현, 정성식, 채효정, 홍석만
- 월 1회 모임

4) 활동

(1) 2025.01.23 정세포럼 '자본의 위기와 극우세력의 준동, 광장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사회 : 홍석만(참세상연구소)
- 발표 : 어떠한 위기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채효정 | 체제전환연구모임)
- 토론 : 서영표(제주대 사회학과), 정정훈(서교인문사회연구실)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공성식(플랫폼C)
- 참여 : 현장참석 40명, 온라인 참여 70명 /(온오프 신청 163명)
- 자료 : <https://bully.kr/BIV3ItV>

(2) 2025.02.19. '정세좌담_트럼프2.0시대, 정세를 조망한다' 참세상연구소 X 체제전환연구모임

- 사회 : 선지현(체제전환연구모임)
- 좌담 :
 - 차태서(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 트럼프2.0 시대 국제정치 및 미국정치
 - 윤여협(미국 덴버대 경제학과) : 트럼프 경제 정책 분석 및 전망
 - 김선철(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체제전환연구모임) : 기후 문제 및 미국 사회운동 동향
- 자료 영상 : <https://www.newscham.net/weeklydebate/112456/?page=1>

(3) 2025.06.26. [작은포럼] '체제전환을 위한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

- 사회 : 홍석만(참세상연구소)
- 발표 : 미류(체제전환연구모임)
- 토론 : 나영(성적 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구준모(기후정의동맹), 정성식(시민건강연구소), 이승철(공공운수노조)
- 참여 : 40여 명
- 포럼 자료 : <https://buly.kr/A45kuJp>

5) 7~12월 계획

- 자본주의 체제 분석 세미나
- 대안체제에 대한 운동진영의 논의 검토
- 한국 사회운동에 대한 진단과 과제 검토

4. 전략팀

1) 전략팀 구성

- 2024년 7월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천전략 마련을 위해 전략팀 구성하기로 함.
- 팀원 : 정록, 남영란, 구준모, 호림, 류민, 미류

2. 전략팀 활동

- 전략 논의 위한 세미나 진행. 한국의 사회운동, 노동운동, 진보정당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미국의 심층조직화 논의 등을 검토.
- 11월 19일 촉진위원회 워크숍에 중기 과제 실천전략 자료 제출. 이후 논의를 진전시켜 포럼에서 발표하기로.
-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임 중단. 윤석열 파면 이후 기존 논의를 재개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정세에 맞추어 문제의식을 이어가기로 하며 전략팀 해소를 결정.

[보고4] 재정 보고

* 별첨

[논의1]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사업 계획

1. 목표/과제

1) '평등으로 가는 운동'의 전선을 만들자

- 윤석열 파면을 위한 투쟁을 벌이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주요한 가치로 평등이 부각되었다. 체제전환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운동들의 노력과, 심화되는 불평등의 구조 속에서 대중적으로 형성된 요구가 만난 결과다. 체제전환운동이 대중과 접속하는 기표로 '평등'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며 공통의 지향으로 만들어가자. '평등'을 통해 체제전환의 미래를 더욱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하자.
- 이를 위해서는 여러 운동의 요구와 구체적 투쟁들이 '평등'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담론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의 내용을 채워가며 여러 운동이 가로지를 수 있는 계기를 촉진하여 체제전환운동의 폭을 넓혀가자. 평등의 전선을 가시화할 전략적 거점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사시킬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

2)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체제전환운동을 촉진하자

- 파면 투쟁을 거치며 기층 민중과 함께 호흡하는 풀뿌리 조직 강화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었고 동시에 가능성도 열렸다. 단위마다 조직의 성격이나 형식, 의제 등에 따라 조직화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체제전환운동은 여러 단위에서 풀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모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촉진하면서 다양한 흐름이 만나고 붙어가는 과정을 함께 기획해야 한다.
- 파면 투쟁을 통해 지역에서 체제전환운동을 조직하는 흐름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역마다 지형과 조건이 상이하여 하나의 전략으로 체제전환운동을 확장하기는 어려우나 '지역'을 거점으로 할 때 부딪치게 되는 공통의 고민들도 있다. 서로 다른 지역이 교류하며 각 지역에서 체제전환운동의 구심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자.

2. 주요 사업

1) 기후정의행진 ‘평등으로 가는 공공성’ 행진단 (9/27)

1-1) 취지

- 연례화된 기후정의행진은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가능성을 확장하는 주요한 계기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후정의’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여러 논쟁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장이 되고 있음. 광장을 이어가는 흐름으로 ‘평등’을 가시화하며 기후정의를 관통하는 원칙으로서 평등의 의미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될 필요가 있음. 공공재생에너지 투쟁은 기후정의운동의 방향에도 중요한 참조점이 되는 투쟁이자 공공성운동의 가능성을 환기하는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계기로 여러 공공성운동이 연결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음.

1-2) 목표

- 927기후정의행진에서 여러 운동과 시민들이 ‘평등으로 가는 공공성’ 대오를 이루어 행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후정의행진이 풍성하고 규모있게 조직될 수 있도록 한다.
- 광장에서 외친 ‘평등’의 요구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반차별과 공공성의 연결고리를 드러냄으로써 여러 운동이 가로지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1-3) 추진 방안

- 평등으로 가는 공공성 행진단 (약칭 평등행진단) 제안 : 기후정의동맹과 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제 단체들에 제안.
- 평등행진단 준비
 - 조직위 내 준비팀 구성 (7월) : 기후정의동맹 활동가 포함하되 기후정의동맹의 집행력이 92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에 집중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실행 역할은 체제전환운동 조직위가 더 맡아야.
 - 기획회의(8월) : 여러 운동의 요구가 연결되는 지점을 대중적으로 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말들을 함께 찾으며 공동의 메시지 만들기. 리플렛 등 홍보물 준비. 지역 행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 평등행진단 모집과 홍보 (9월) : 홍보와 조직. 카드뉴스 등
- 927 기후정의행진 참가 : 행진 전반 준비 상황 고려하여 대오 구성.

2) 가자! 평등으로 민중의 행진 (12월)

2-1) 취지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즈음이자 이재명 정부 첫해의 마지막 국회 회기.
- 윤석열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는 해소를 결정하며 12월 집회 및 행진을 추진하기로 함. 평등으로 가는 운동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지 함께 확인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2-2) 목표

- 세바넷으로 모였던 운동들이 평등의 요구를 들고 다시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자.
- 윤석열 파면 이후 이재명 정부의 기초를 평가하며 평등의 과제를 버리자.
- 광장에 모였던 대중들과 함께 평등의 요구를 이어가자.

2-3) 추진 방안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세바넷 참여 단위들과 간담회 (7-8월)
- 공동주최 제안 위한 초동모임 (9월) : 12월 집회/행진의 기초와 목표, 주요 흐름 논의.
- 기획단 구성 (10월) : 사전 흐름으로 10월 반빈곤/주거권 행진, 11월 노동자대회 등 공동 참가. 정세토론회 등 추진.
- 12월 6일(가안) 집회와 행진. (비슷한 취지의 비상행동-기록기념위원회 사업 추진될 수 있음. 시간 등 고려하여 정함)

3)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2026년 1월 마지막주 또는 2월 첫주)

3-1) 목표

- 체제전환운동을 널리 알리고 심화하는 동시에 동료를 조직하는 과정으로 연례화.
- 광장 이후 1년을 돌아보며 체제전환운동의 과제를 구체화하고 가능성을 서로 살피는 자리로.
- 계엄 이전 준비하던 전략(조직화/세력화) 내용 반영하되 주제를 구체화.

3-2) 추진방안

- 8월 촉진위 회의에서 주요 세션 주제 논의. 세션별 준비팀 구성.
- 10~11월 일정 및 주요 기획 논의 및 역할 분담
- 12월 홍보 시작.

- 1월 마지막주 또는 2월 첫주, 서울에서 , 토요일 포함 2일 또는 3일 일정으로

4) 평등으로 가는 공동투쟁 (2026년 4월)

- 26년 4월은 윤석열 파면 1년, 6월은 이재명 정부 1년이 되는 시점. 2025년 하반기를 경과하며 이재명 정부 전반기의 전선과 쟁점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됨. 한국사회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여기는 사회운동의 결집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특히 차별금지법으로 상징되는 평등이 나중으로 밀리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모멘텀을 만들 필요.
- 다만 적절한 시점이나 구체적 요구를 미리 기획하기는 어려움. 윤석열 파면 광장에서 모였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로 가자는 방향을 고려하며 정세적 투쟁의 계기를 함께 만들어볼 수 있도록 추진.

3. 특별 사업 - 체제전환 지역정의 네트워크(가) 구성

1) 배경

- 체제전환운동 조직위는 구성 당시부터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운동의 중요성을 상기해 왔으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하면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는 못하였음. 2025체제전환운동포럼에서도 풀뿌리 조직화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전략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함.
- 세바넷으로 파면 투쟁을 함께 벌이며 여러 지역에서 체제전환운동을 만들어가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연결될 수 있었음. 이런 흐름의 일부는 사회대전환연대회의를 통해 이어지기도 했음. 그러나 지역마다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조건, 지형 등이 상이하여 하나의 틀로 일괄하여 연결하기는 어려운 상황. 조금씩 다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흐름을 살피되 지역 거점의 체제전환운동 강화를 위한 교류와 전략 논의가 필요.

2) 목표

- 지역을 거점으로 체제전환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려는 단체/활동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획을 추진한다.
- 전국적 운동의 건설 차원에서 지역정의를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의 구체적인 운동들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적 지원을 모색한다.

3) 추진방안

- 조직위 내 특별팀 구성. 충북모임, 부산모임 포함 지역 거점 단체/개인 조직위원들.
-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체제전환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을 논의하여 추진.
- 지역 운동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 형식에 대한 의견을 모아 네트워크 구성.

[논의2]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집행구조

1. 배경

- 현재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는 공동조직위원장 2인, 촉진위원회, 기본사업팀(조직팀, 선전팀)으로 구성. 공동조직위원장단과 팀장단이 팀장단 회의를 일상적으로 진행하며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추진.
- 이는 2023년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 포럼과 정치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틀. 정치대회 이후 현재의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를 안정화하기 위해 선전팀과 조직팀이 집행의 기본단위를 이루어 뉴스레터 발간, 체제전환 수다회, 홈페이지 운영 등 일상 사업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세바넷으로 정세적 투쟁에 집중하는 동안 일상 사업의 운영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확인.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벌이면서 평등으로 가는 운동의 전선을 만들고 체제전환운동의 세력화를 위한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조직위의 주요 과제와 목표가 되었음. 조직위가 이후 '조직위의 사업'보다 '조직위와 함께 정세를 타고 넘는 공동의 경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일상/기본사업 배치보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위 전체의 힘을 모아가고 체제전환운동을 확장하며, 여러 운동이 각자의 운동에 '더해' 체제전환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운동이 체제전환을 향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는 측면에서 집행구조를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 모이고 흩어지는 순환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조화.

2. 운영 및 집행구조 재편 방향

1) 촉진위원회 역할 강화

- 작년 7월 촉진위원회 구성 후 채 안정화되기도 전에 정세적으로 세바넷에 집중하면서 촉진위의 위상과 역할이 안정화되지 못함. 촉진위원회가 “조직위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정세와 운동의 조건을 살피며 필요한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여러 운동의 의제, 지역 등을 고려하여 15인 안팎의 촉진위원을 두고 격월 1회 회의를 여는 구조를 유지하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 이를 위해, 촉진위 참여하는 여러 운동의 현황과 주목해야 할 쟁점이나 정세동향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배치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 조직위 활동에 관해서도 수개월 단위의 사업 방향 논의를 강화하고 여러 운동을 체제전환운동으로 초대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

현재 촉진위원회 구성

미류(공동조직위원장), 홍명교(공동조직위원장), 김지윤(녹색당), 메밀(체제전환부산모임),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윤영(빈곤사회연대), 이진영(청시행), 정누리(체제전환충북모임), 정상천(노동당), 정재환(전환), 지오(행성인),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한재각(기후정의동맹)

** 지역특별팀장: 남영란(체제전환부산모임)

** 체제전환연구모임 담당 : 선지현(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2) 기획실행위원회 구성

- 기본사업팀의 상시적 운영은 팀워크를 강화하고 조직위 전반의 결속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주요 사업의 실행 역할까지 분담하게 되면서 피로감이 가중되기도 하며 상시 집행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조직위원들의 결합이 어렵기도 함. 이에 기존의 선전팀, 조직팀 등 기본사업팀을 해소하고 기획실행위원회를 구성.
- 기획실행위원회는 조직위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을 함께 할 조직위원들로 구성. 참여하는 조직위원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기별, 사업별 결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
- 체제전환운동포럼 등 주요 사업 중 팀 운영이 필요한 경우 기획실행위원회 안에서 한시적 팀을 구성하여 운영.

3) 팀장단회의 보강

- 기본사업팀을 두면서 팀장과 공동조직위원장들이 격주 회의로 조직위 주요 사업 총괄과 점검, 일상업무 등의 역할을 맡아왔음. 기획실행위원회를 유연하게 움직이려면 이완된 시기에도 필요한 논의 지속하기 위한 안정성 필요. 기존 팀장 결원 등 성원이 줄어들었으나 역할이 줄어들지는 않은 상황에서 보강이 필요함.
- 기본사업팀을 해소하면서 팀장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기획실행위를 움직이기 위해 한시적 팀 구성이 필요한 때도 있으며 상시적으로 조직위 사업 점검 논의가 필요하여 '팀장단회의'라는 명칭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보임.

